

第289回國會 教育科學技術委員會會議錄 第 2 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4月16日(金)

場 所 教育科學技術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주요업무보고

- 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 나. 국사편찬위원회 소관
- 다. 국립특수교육원 소관
- 라.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소관
- 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관
- 바. 국립국제교육원 소관
- 사. 국립중앙과학관 소관
- 아. 국립과천과학관 소관
- 자. 대한민국학술원 소관

審査된案件

1. 주요업무보고 ..... 1

- 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 나. 국사편찬위원회 소관
- 다. 국립특수교육원 소관
- 라.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소관
- 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관
- 바. 국립국제교육원 소관
- 사. 국립중앙과학관 소관
- 아. 국립과천과학관 소관
- 자. 대한민국학술원 소관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이종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습니다.

○입법조사관 김대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걸 지난번 사무처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원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직원 인사)

1. 주요업무보고

- 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 나. 국사편찬위원회 소관
- 다. 국립특수교육원 소관
- 라.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소관
- 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관
- 바. 국립국제교육원 소관

**사. 국립중앙과학관 소관**

**아. 국립과천과학관 소관**

**자. 대한민국학술원 소관**

○**위원장 이종걸**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오래간 만에 한 자리에서 장관님, 두 분 차관님 함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과학기술부 본부와 8개 소속 기관이 대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각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핵심사항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병만 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육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의 선진화를 위하여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교육과 연구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개발을 이룸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하에 우리 부는 2010년 정책목표를 창의와 배려가 조화된 교육과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과학기술로 정하고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합니다.

먼저 창의와 배려가 조화된 교육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등 초·중등 교육 과정에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들의 능력과 더불어 창의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선발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원학교·기숙형고교·자율형고교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우수한 학교를 육성하고 학교 자율화 추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학력 격차 해소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다양한, 그리고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운영과 더불어 전문계고 체제 개편, 취업 기능 강화 등을 통해서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선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문대학 특성화를 통한 고등 직업교육의 내실화, 평생학습중심대학 등 성인의 평생 능력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공교육 내실화 노력과 함께 우수한 사교육 대체 서비스의 제공, 학교 운영의 합법성,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서 사교육비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EBS 수능강의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유아교육에서부터 탈북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저소득층 자녀, 위기학생 등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입니다.

첫째, 초·중등 단계의 수월성 교육에서부터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 우수연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석학과 스타과학자 육성까지 전주기적인 고급인재 양성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 R&D 투자 확대와 더불어 투자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실현을 위해 녹색생활 교육과 연구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녹색생활 체험 기회 등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저탄소형 생활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고 녹색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섯째, 우주기술 자립화 및 원자력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주기술 분야에서는 나로호 2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도 착수하겠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지난 3월 30일 요르단과 연구용 원자로 사업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세계 연구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중소형 원자로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장학프로그램(GKS)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과학기술 분야 원조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교육과학기술부 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에도 교육과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의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과학기술부 간부와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제1차관입니다.  
 김중현 제2차관입니다.  
 김차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수태 인재정책실장입니다.  
 김영식 과학기술정책실장입니다.  
 광창신 학술연구정책실장입니다.  
 편경범 대변인입니다.  
 박준모 감사관입니다.  
 조윤래 정책기획관입니다.  
 이기봉 교육선진화정책관입니다.  
 임승빈 미래인재정책관입니다.  
 양성광 인재기획분석관입니다.  
 김규태 평생직업교육국장입니다.  
 이시우 학교지원국장입니다.  
 이원근 학교자율화추진관입니다.  
 이상진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윤현주 과학기술정책기획관입니다.  
 한석수 정책조정기획관입니다.  
 장기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장입니다.

니다.

박항식 기초연구정책관입니다.

윤인재 학술정책관입니다.

김관복 대학지원관입니다.

홍남표 원자력국장입니다.

김주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장입니다.

성삼제 교육비리근절및제도개선추진단장입니다.

김민수 정책보좌관입니다.

다음은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국립과천과학관장입니다.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정옥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엄상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은우 국립중앙과학관장입니다.

이효자 국립특수교육원장입니다.

백종면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입니다.

정상기 국립국제교육원장입니다.

우승구 대한민국의학원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 기관장 인사)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며 오늘 주시는 의견들은 깊이 새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걸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김차동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일반현황에서 2010년도 정부입법 추진현황의 순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정책 방향은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창의와 배려를 조화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고급인재 양성과 R&D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의 세계 홍보를 강화하고 국제장학 프로그램인 GKS를 본격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를 10대 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니다.

먼저 핵심역량과 창의성·인성이 조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축소하여 학생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각 교과목 별로 특성에 맞는 창의·인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과 활동에 창의·인성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그 예시가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창의성과 인성 함양의 기회와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시도별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 지역교육청을 지정하고 창의체험자원 지도를 작성하여 지역 사회와 기업, 정부부처 등이 보유한 다양한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인성 교육에 적합한 방향으로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글쓰기, 토론·발표, 관찰·실험 등 수행평가를 내실화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상세히 기록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 활용하겠습니다.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술·체육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1교 1나눔 운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및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점수 위주 학생 선발에서 잠재력, 소질,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켜 학생을 다양한 학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초·중의 전원학교, 고등학교의 기숙형 고교 등 농산어촌 실정에 적합한 학교 모형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 여건이 불리한 지역 학교 중심으로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확대하여 공립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는 학교자율화는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의 교직 유입을 확대하고 교직사회

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 인사의 개방을 확대하고 지역 교육청을 학교경영컨설팅, 학부모 교육, 학생 상담·진로 컨설팅 및 교수-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학교현장 지원기관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교원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모든 학교가 전면 시행토록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전문성 심화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성 신장 필요 교사에게는 집중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연구를 정례화하여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단위학교의 학력 향상 노력을 지원하고 학력 향상 중점학교는 중점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든 초중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책임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보 공개·평가를 통한 책무성을 보장하고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표에서 보시듯이 시·도 교육청 평가는 학생, 교원, 학부모 등 성과지표로 단순화하여 고객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상시평가를 실시하여 정책 추진을 유도하여 평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중고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부모의 전문성을 살린 자원봉사,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 참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직업교육의 선진화입니다.

초·중등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자체, 경제단체 및 관련 부처 등과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업 체험, 진로 정보 및 컨설팅 제공을 위한 부처 합동 박람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선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초에 마이스터고는 이미 21개교가 성공적으로 개교하였고 현장 마이스터를 교장, 교원으로 초빙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체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계고 등으로 체제 전환을 유도하고 유형을 단순화시켜 나가고, 전문계고 취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선도학교를 선정·지원하고 취업 희망 학생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기

업체에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대학 특성화 강화 및 글로벌 수준 전문대학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성인의 평생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육성, 기술계 학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을 평생교육법상 직업기술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 평생학습계좌제 시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 교육비 부담 경감을 가시화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삼고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축적된 사교육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사교육 원인을 철저히 진단하고 이에 기초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통해 영어사교육을 경감하겠습니다.

초등 영어는 2010년 3·4학년부터 연차적으로 1시간씩 확대 적용하고 중등 영어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 수업을 실시하고 수준별 이동 수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도록 교사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TaLK 장학생 등을 활용하여 농산어촌·도서벽지 지역의 실용 영어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2012년에 본격 시행토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교육 대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경쟁력을 제고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습니다.

정규교육 과정과 연계한 수준 높고 다양한 심화보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저소득층 및 맞벌이를 위한 돌봄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학부모 코디네이터 및 엄마품멘토링 등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우수 민간기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위탁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육성·확산시키겠습니다.

2012년까지 1000개교로 확대하여 공교육 정상

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가정학습 및 IPTV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망을 고도화시키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BS 수능강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스타강사를 영입하고 우수 현직 교사를 선발·활용하는 등 최고 강사진을 확보하고 명품 교재를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MOU를 체결하여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원 관리 강화입니다.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원의 교습시간 단축, 학원비의 공개, 신고포상금제 지속 실시 등 학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맞춤형 장학금을 확충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학재단법 개정 등을 통하여 교내 장학금 및 공익기금 확충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이 통과된 후 금년도 대출을 위해서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엄격한 학사 관리, 저소득층을 위한 교내 장학금 확충을 노력하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금년도 1학기에는 일반 대출을 포함하여 약 40만 건의 대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로 능동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을 선진화하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기본과정과 종일제로 구분 운영하며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유아의 종일반 이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학생 및 소외 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을 만 5세 유아와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고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며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자녀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긴급 학비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업 중단 및 위기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를 확대 실시해 나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인 고급인재 양성입니다.

초중고의 잠재력 있는 학생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영재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심화된 영재교육을 추진하며 선발 방식도 시험 중심에서 교사의 학생 관찰 추천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교 영어·수학 과목을 중심으로 기초·심화 과정을 운영하여 수준별 수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등학교는 2011학년부터 모든 학생들을 입학사정관 전형 및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하고 외고, 국제고는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 주도 학습 전형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의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일환으로 이공계 학부 학생 스스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연구하도록 지원하는 URP 제도를 확산시키고 기초과학에 잠재력 있는 석·박사급 인력을 선발하여 최소 3년간 특별연구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국내 박사 양성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박사 양성 프로젝트를 대학원교육 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바 금년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재정지원 방향을 협의하여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BK21 사업을 통해서 구축된 대학원 인프라를 토대로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차세대 박사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탁월한 박사 후 연구자에게 특별연구지원금을 수여하여 창의적 개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성과도 창출하겠습니다.

소외 학문 대학강의 지원, 한문 고전 번역 전문가 양성 등 전략적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핵심 인문사회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 발전을 위해 해외 한국학자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등 지식서비스 분야 우수 전문인력도 양

성해 나가겠습니다.

석학, 스타 과학자를 육성하겠습니다.

우수 성과를 창출한 인문학자 또는 과학자가 기존 연구를 심화·발전시키면서 연구역량을 계속 강화하여 최고 연구자에 이르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입니다.

대학·연구기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립대학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립대 개혁의 시발점인 서울대 법인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적·상시적 구조조정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엄정한 대학 평가 및 정보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립대학이 교수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추진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교수봉급체계를 업적과 보수가 연계되는 성과연봉제로 개편 추진하겠습니다.

대학 학부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학부교육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글로벌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벨포럼 개최, 대학강의 공개를 확대 운영하여 WCU 사업 성과 공유 확산에 주력하면서 대학연구인력 국제 교류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출연연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부경쟁 시스템을 강화하여 성과 우수자와 미흡자에 대한 지원 차등화를 통해 연구 생산성 극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출연연 간 중복 기능 조정 및 조직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출연연 체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기능적인 제도 개선과 구조적인 거버넌스 개선 방안이 병행 추진되어 나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대학·연구기관의 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촉진에 중점을 둔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방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지역특화 산학연 협력을 촉진해 나가고, 대학 교원과 연구기관 연구원이 양 소속기관 업

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학-연 교수제 도입 등 대학·출연연 간 인력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연 연구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출연연 연구원의 대학 안식년제, 대학교수의 출연연 안식년제 유도 등 장단기 프로그램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과제입니다. R&D를 선진화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까지 국가 R&D 총투자를 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정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확대된 R&D 예산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기초·원천 연구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R&D 투자 확대와 함께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성과 확산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기획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 이전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용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개의 전문위원회, 즉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운영위원회를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직접 연계하도록 운영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배속시킨 바 있습니다.

기초연구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모험연구사업에도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녹색기술 등 국가수요 중심의 전략 기초연구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 장비·시설 등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KSTAR 성능 향상 및 핵융합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국가 대형 연구 시설·장비 구축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천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술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NT·BT·IT 등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원천연구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신약개발지원센터,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융합 첨단기술을 선점하고, 뇌질환 예방·치료 등 뇌 연구를 확대 지원하고 뇌연구원 설립도 본격 추진하여 향후

뇌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세계 일류의 기초원천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 등 부처·사업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를 원천연구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원천연구 성과는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연계하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수 연구성과 창출·보호·활용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 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핵심 애로기술을 중장기적으로 함께 연구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원천 연구 성과가 사업화·상용화까지 갈 수 있도록 R&D-IP협의회를 통해 교과부와 특허청 사업 연계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세계적 수준의 세종국제과학원을 설립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 교육·문화·예술이 융합된 국제적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창조적 지식창출 허브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과제로 녹색 교육·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 안팎 녹색생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녹색교육을 강화한 초중등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녹색성장 연구학교를 통해 학교 스스로 차별화된 녹색교육 과정·방법·자료 등을 연구하여 적용하고, 지역 내 다른 학교로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녹색생활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녹색 생활과학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방과 후에 체험·탐구·실험을 통해 학생·주민들의 녹색생활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고, 또한 국립과학관을 활용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녹색생활·녹색성장 교육 체험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투자를 확대하고 녹색인력 양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

여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융합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녹색기술의 국제적인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 개도국 지원을 통한 그린 과학기술 외교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녹색기술 선진화를 위한 연구·협력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녹색기술 정보종합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국가녹색기술대상을 제정하여 포상하고, 범부처 녹색기술포럼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로 우주기술 개발 및 원자력 수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 우주기술 자립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2010년까지 60개의 우주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산업화 시범단계로 다목적 실용위성 3A호 본체를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하는 등 위성개발 기술의 민간 이전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나로호 2차 발사 및 한국형 발사체 독자 개발에 착수하겠습니다.

나로호 1차 발사 시 위성궤도 미진입의 원인 분석을 완료하고 철저한 사후조치를 통해 나로호 2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실용위성을 자력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우주발사체의 독자 개발에도 착수하겠습니다.

국가 수요에 대응한 인공위성 발사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다양한 국가 수요를 반영하여 통신해양기상위성 등 다양한 인공위성을 개발하여 발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우주 강국과 협력을 다각화해 나가서 우주기술을 선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자력 수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연구용 원자로 수출 가속화입니다.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는 한국 원자로 역사 50년 만에 사상 첫 원자력 플랜트 수출로서 2010년 3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상반기 중 건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원자로추진단을 발족하여 태국, 베트남, 남아공, 사우디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출용 중소형 원자로 개발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형 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우리 고

유의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SMART)를 2011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며, 카자흐스탄, 칠레, 말레이시아 등 중소형 원자로 관심국들과 사전 수출협의를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범부처적 원자력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즉, UAE 등 원전 도입국에 우리나라 원전 수출을 겨냥하여 원자력 안전규제 인프라를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 원전 추가 건설, 원자력 수출 및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원자력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 및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본격화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여 파이로 기술 및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향후 40년, 50년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이고 원자력 연구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격향상 과제입니다.

먼저 교육과학기술의 세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표 아래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끈 교육과 과학기술의 성취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서 교육과 과학기술 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략적 대외 정책 홍보, 국제교류 확대, 국제기구 연계활동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한국 교육과학기술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국제 장학 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을 본격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 국제 장학 프로그램을 본격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정부 초청 장학생 사업 등 내·외국인 대상의 장학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연계·관리함으로써 국제 장학 프로그램 하나로 통합 브랜드화하는 것입니다. GKS 세부 프로그램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

서 외국인 유학생 제도를 개선하고, 글로벌 소양 제고를 통한 차별을 개선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정착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안 과제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저한 나로호 2차 발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잠깐 보고드리면, 나로호발사조사 위원회에서 페어링 비정상 분리 원인조사 결과를 지난 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3월까지 페어링 보완 조치 및 지상시험을 통해 분리 성능을 검증하였고, 나로호 상단·1단·탑재위성은 나로우주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재는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성능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사 준비 내용을 보고드리면, 나로호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발사 준비 상황을 총괄 관리·점검하고, 1차 발사 시에 성공적으로 작동한 부분까지도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발사 운용 설비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도 수행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나로호 2차 발사 일정을 최종 확정하고 그 후 디데이, 그러니까 발사 시까지 관련 기술적 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전략형 원자력 기술 개발 및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연구용 원자로 수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연구용 원자로 시장은 10조에서 20조 원 규모인 50여 기로 수요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요르단 연구로 설계·건설 사업 수주로 국제 연구로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용 신형 연구로 설계·실증을 추진하도록 하고, 중소형 원자로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원자로 시장은 50년까지 700여 기의 수요가 전망이 되고 있고, 350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러한 시장 선점을 위해서 스마트(SMART) 원자로를 2011년까지 표준설계인가 후에 수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원전 도입 예상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원자력 안전규제패키지를 개발·보급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자력 수출입 체계도 보강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적기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허가 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원자력 수출입 통제 온라인 시스템 용량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분야 고급인력 수급 및 양성과 관련하여 요르단, UAE 원전 수출을 지원하고, 향후 잠재적 수출 수요에 대비한 고급 안전규제, 연구개발 및 수출입 통제 등과 관련한 고급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정부입법 추진현황은 71쪽까지 현재 2010년도 계획과 교과위에 계류 중인 정부 발의 법률안, 또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법률안을 요약해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정옥자 안녕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건을 준비했지만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현재 인원이 81명이구요, 그리고 예산은 124억입니다.

그리고 과천의 교육원로의 6000평 대지에 3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수집자료는 37만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사편찬위원회가 1946년에 설립돼서 65년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사료의 조사·수집·보존 그리고 이렇게 된 사료를 연구해서 편찬해야 하고 또 간행하는 그런 업무를 주 업무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업무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를 정보화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느냐 이런 쪽으로 그 사업의 성격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전부터 한 한국역사관계 정보화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메인서버가 국편에 있으면서 이것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쪽의 예산이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대국민서비스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런 쪽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역사 정보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대국민 온라인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왕조실록은 번역본과 원본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역사 콘텐츠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조선왕조실록 대국민 온라인서비스에 올라오는 무료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왕조실록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그 외의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고려사·삼국사기·삼국유사 정도는 번역본을 무료로 서비스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사편찬위원회의 최대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2006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사교육의 강화라는 측면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부터 행안부에서 고등고시에, 저도 고등고시라는 말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외무고시·행정고시를 고등고시라고 아직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응시자격시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출제 장소의 보안이 문제가 되고 문제 은행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처음에 1년에 한 번 하다가 그다음에 두 번 하다가 올해 세 번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네 번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력과 출제 문제 그리고 출제장소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국편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연수과정에서는 교원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급 이상 국가공무원들의 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국사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다섯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연수과정에서는 한문초서와 일본어 초서를 같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통을 읽어 낼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 부분은 중·고등학생들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강원대학교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창의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틀에 박힌 역사교육, 암기교육이 아니고 창의적으로 새롭게 역사에 다가가는, 그러니까 향토사적으로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동영상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의 그런 활동을 여기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편찬위의 최대 문제는 정보화사업을 어떻게 본격적으로 해서 대국민서비스를 할 것인가의 예산 문제와 인력 문제하고 그다음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가 점차로 중요해지는데 여기의 인력과 예산의 문제 두 가지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걸 대학에서도 명쾌하게 재미있게 강의하셨는데 오늘 잘 요약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립특수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특수교육원장 이호자 안녕하십니까?

국립특수교육원장 이호자입니다.

지금부터 국립특수교육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립특수교육원은 전국의 특수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개발, 특수학교 교과서 또는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연수와 특수교육 정보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1994년에 설립된 유일한 특수교육기관입니다.

조직 구성은 4과 2팀으로서 저희가 정원 3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의 주요사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사업으로는 실태 조사 도구 개발과 특수학교 교과서 개발 그리고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그리고 현장 중심의 특수교육 정책과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수사업으로서 자격연수와 방문형 직무연수, 재외 한국학교 교원 연수, 특수교육 전문가 해외 연수 등 55개 과정에 맞춤형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정보운영과 사업으로는 장애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와 장애 영역별 특성에 맞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교육정보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화 관련 연구 등 특수교육 이터닝 지원사업이 1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및 학부모 그리고 특수교육 전문가 모든 교원들의 염원과 숙원사업인 신청사 신축 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원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1300평의 작은 규모로 있는데 저희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신도시 개발지구로 신청사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8월에 저희가 준공을 하여서 10월 1일에 신청사 개청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국립특수교육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저희 원 전 직원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제공받는 장애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과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걸** 국립특수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백종면**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백종면입니다.

우리 연수원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비전과 목표, 2010년도 중점 추진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리 원은 미래를 위한 교육, 미래를 향한 과학기술이라는 비전 아래 일 잘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교육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과 정원입니다.

우리 원은 정책연수과 등 3개 과, 정원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지방이전사업비 174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7억 49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연수 성과입니다.

2009년 집합연수 72개 과정 175기 7833명, 원격연수 37개 과정 285기 8만 8031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교육훈련 만족도는 86.2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국가 교육정책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정책연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과부 정책을 적시에 현장에 전파하기 위한 정책연수 과정, 국정철학 및 비전 공유를 위한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비해서 지표별 맞춤형 교원연수프로그램을 시도 교육연수원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동 평가의 조기 정착을 위한 맞춤형 연수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과학기술부 일반직 공무원의 정책능력 향상과 직결되는 직급, 직무별 역량모델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핵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시학습 체제 지원을 위한 원격연수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활용 지원과 다양한 연수 수요에 부응하는 학습자 중심의 연수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및 자체평가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수요분석을 통해 과학적·합리적인 교육훈련체제를 수립하고 교육과정 운영 성과 등을 주기적·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품질 연수를 제공하기 위한 연수 지원·협력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

도교육연수원과 협력 체제 구축, 맞춤형 교원 연수 지원을 위한 연수정보시스템 기능 강화 및 연수환경 개선 등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이하 2010년도 연수과정 개설 현황 및 계획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엄상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엄상현입니다.

저희 위원회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기능은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 처분, 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으로서 이에 따른 소청심사와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심사 그리고 이것에 근거한 행정소송 수행으로 구분됩니다.

저희 위원회의 조직은 심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총 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상근을 하고 있고 비상임위원이 5명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임명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올해 예산은 약 38억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16억이 많습니다. 이것은 올해 청사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현황은 올해 2010년의 경우 124건이 접수되었고 전년도 이월이 89건으로서 현재 총 213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동안 57건을 처리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청 건이 156건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소청심사청구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395건에 해당이 됩니다.

인용률 추이를 보면 2005년부터 증가하다가 작년 2009년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의 추세는 소청심사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초중등에 대한 부분보다 조금 많습니다. 2009년의 경우에 대학은 218건이고 초중등 부분은 177건입니다.

소청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 징계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한 청구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타 예를 들면 폐과면직이나 직위해제 등 이런 관련 청구는 최근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충심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총 8건이 접수되었고 올해는 현재 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년도 이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청 결과에 따른 소송 현황입니다.

2009년의 경우에 당해연도 건으로는 61건이고 2008년 전년도 이월이 된 것이 72건으로 총 133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승소한 사건이 42건이고 패소가 14건으로 총 56건이 처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로 이월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건수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25건에서 작년 2009년 61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송제기자는 교원과 학교법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승소율은 지난 1991년에서 2009년까지 10년간 승소율은 80.9%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사 이전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을 위하여 국군서울지구병원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사 부지로 이전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도심으로 청사를 임대하여 이전하도록 작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 29일 서울시 중구 순화동 7번지 삼성생명일보빌딩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국제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 정상기** 국립국제교육원 업

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2쪽 일반현황을 보면, 저희 원은 74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금년에 약 792억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원 주요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제장학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GKS 사업, 영어 공교육 지원사업, 유학생 유치사업, 재외동포자녀 교육사업입니다.

우선 4쪽 GKS 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GKS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그리고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입니다. 작년에 504명을 초청했었는데 금년부터 200명 증원해서 금년에 70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6쪽 맨 상단에서 보시는 바처럼 전략지역 국가 초청 비중을 확대하고 선발 방식도 과거 재외공관 추천에만 의존하던 방식을 다소 변경해서 재외공관과 각 대학이 동시에 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들 장학생들의 한국어연수 능력 강화를 위해서 6쪽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부터 장학생들에 대해서 한국어연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취득했을 때만 진학을 허용하고 무급의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도 상실토록 하는 등 한국어연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한편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외국인 장학생들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각 지역별로 장학생 동문회를 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17개국 20개 지부가 결성이 돼 있고 금년의 경우 10개국에서 동문회가 결성되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8~9쪽입니다.

정부초청 장학생사업과는 별도로 일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신규로 외국인 우수 자비 유학생 지원사업 또 외국인 우수 교환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국비유학생 선발·파견사업입니다.

국비유학생들은 작년까지 매년 약 40명을 선발해서 파견해 왔습니다. 금년에 70명으로 확대해서 실시 예정이고 그중에 저소득층자녀 2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부터 24쪽까지는 일본 및 중국과의 각종 학생 또는 교사 교류계획 또 국외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상세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으로 가겠습니다.

25쪽에서 30쪽까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분입니다.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도 국내 각 대학들과 연계해서 유학생 박람회 개최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한국유학안내시스템 활용, 유학정보 지원사업, 유학관계자 초청연수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4월 초에 저희 원에 유학생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30쪽 보면 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1쪽 영어 공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영어 공교육 지원사업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지원사업—즉 EPIK이라고 저희가 약칭해서 부릅니다—또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사업(TaLK 사업)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사업은 작년의 경우에 국내에 와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약 18%를 저희 원에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선발했습니다. 금년에는 1600명을 선발 예정입니다.

한편 영어봉사 장학생사업(TaLK 장학생사업)은 전원 저희 원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상당히 잘 정착되고 있고 금년 9월 학기에는 600명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국내 농산어촌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원어민선생님들이나 영어봉사 장학생들 선발 시에 최대한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뽑지 않는 약 80%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도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한국 문화와 역사 등 사전연수를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이 귀국한 후에 친한인사 또는 지한

인사로 남을 수 있도록 평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재외동포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원의 가장 오랜 사업인 장기교육과정 사업은 작년부터 국립 공주대학교에 위탁해서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도의 교육 실시 내용을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개선해서 실시 예정입니다.

이어서 36쪽 재외동포학생 모국방문 연수사업, 37쪽 재외동포자녀 교육용 교과서 및 교재 개발사업, 38쪽 현지 맞춤형 한국어교재 개발사업, 40쪽 국외 현지교원 초청연수사업, 41쪽 인터넷을 활용한 한국어학습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걸 국립국제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립중앙과학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과학관장 이은우 지난 4월 7일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보임을 받은 이은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국립중앙과학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체 인력은 약 71명이며 예산의 규모는 약 180억입니다.

그리고 전체 부지는 5만 3000평이고 건물은 연면적이 1만 3000평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립중앙과학관은 눈에 띄는 싱싱한 불거리 창출을 위해서, 국립과학관이 대덕으로 이전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후한 전시품도 있고 해서 전시품교체 기본계획에 따라서 전시 주제 및 전시품을 단계적으로 개보수하고 리모델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과학기술전시 체험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착공을 해서 2011년 5월 달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창조적 전당 개념의 체험공간으로 구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과학관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유비쿼터스과학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번에 보시면 User Created Contents라

는 UCC 제작을 통해서 우리 중앙과학관의 홈페이지를 특별하게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동영상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미래의 꿈과 생각을 키워 나가는 과학관을 추진전략으로 하는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의적 교육과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YE! Science 교육프로그램을 브랜드화해서 전국 과학관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특히 YE! Science는 교육청과 협력해서 초·중·유치원 그리고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전국 과학교사, 연구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형 과학전시 전문가들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과학문화시설 확충에 대비한 과학전시 전문인력을 양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09년 개설한 과학전시 전문인력 양성 학위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과학해설사 역량 강화 및 국가인증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과학문화를 테마로 함께 만나는 과학관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보유 수장품 등을 활용한 기획특별전을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테마기획전을 상설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 도서 벽지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는 과학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2010년도에 기획하고 있는 특별전시 계획의 구체적인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과학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촉진하겠습니다.

Sci-Art Village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중앙과학관 주변에 있는 14개 기관과 융합을 해서 합동교통체계를 마련하고 합동영상물을 제작하고 과학·문화·웰빙이 함께 어울리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동천을 첨단과학 체험장으로 활용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익하고 재미있고 고마워하는 과학관으로 육

성해 나가겠습니다.

전통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겨레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연구하는 과학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사료를 수집하고 잘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8페이지에 보시는 측우기는 이번 4월 달에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희 국립중앙과학관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의 한국사무국으로 지정되어 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는 생물다양성정보기구의 집행이사회를 경기도와 함께 한국에서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뒤에 부분들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학과 교육의 융합·시너지 효과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학과 교육과 복지와 오락이 함께 어우러진 재미있고 다시 찾아가고 싶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관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걸** 국립중앙과학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업무보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상희 과학관장님이 외국 기관과의 특수한 기존의 일정이 있으셔서 잠시 이석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대신해서 김선빈 전시연구단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과천과학관전시연구단장 김선빈** 국립과천과학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과학관은 과학기술 분야의 전시·교육·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4300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2008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기초과학관 등 5개 상설전시관과 특별전시관, 천체투영관 그리고 세계적 톱 수준의 첨단 전시공간에 총 685점의 전시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은 77명이고 올해 운영 예산은 213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 및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과천과학관은 개관 6개월 만에 100만 관람객을 돌파하는 등 수도권 대표 과학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등 경영 효율화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선진과학관으로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개선과제입니다.

양적 팽창 위주의 과학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과학관 네트워크의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외국 선진 과학관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과 인력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하드웨어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국내 과학관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과학관은 창조적 과학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상상으로 창조하는 선진 일류 과학관을 국립과천과학관의 비전으로 정하였습니다. 창의적 과학교육과 과학문화 확산의 세계적 모델 정립을 통해 창의적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세계 일류 과학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2010년도에는 전국 과학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시·교육·문화 콘텐츠의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리 중심에서 창조적 공격형으로 경영시스템을 전환하고, 선진국형 과학 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 전시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위탁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세계적 중심의 자체 교육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일방적 공급자 위주의 과학문화 확산 정책에 따른 일반 대중의 낮은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쌍방향 수요자 중심의 과학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진형 과학관 경영시스템을 정착하고 최고 수준의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의적 과학교육 실천과 과학문화 확산 등 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선진형 과학관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과학관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영세한 사립 과학관 등에도 협력을 강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과천과학관이 국내 민간과 국립 과학관 운영의 시스템을 질적으로 제고하고 과학관 네트워크 선진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과학관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아웃소싱 강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향후 사단법인 형태의 과학관후원회를 구성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과 연계 강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과학관 발전을 위한 자원을 끌어들이 계획입니다.

과학관의 기본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 서비스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전시장 관리와 운영 중심에서 탈피해서 선진 과학관의 필수 요소인 전시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현재 상설전시관 중심 운영에서 특별기획전 중심으로 전시관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 중요성이 커져 가고 있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과학관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적 과학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초·중·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미래 과학영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전시물과 연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과학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혁신을 위한 교육 개혁 캠페인을 통해 수학·과학에 기초한 과학영재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청소년의 과학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임·영상 등과 융합된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을 장려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과학 흥미도와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을 서두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온라인 수학·과학 게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기능성 게임과 다양한 비형식 과학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학기술인 우대 분위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금년 10월에는 디지털 시대 과학과 예술의 융합 축제인 국제 SF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기간 중에는 영화제 이외에도 SF컨벤션, UFO와 외계생명체 기획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과학기술 문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과천과학관은 상상으로 창조하는 미래 과학인재 양성의 토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우승구** 학술원 사무국장 우승구입니다.

저희 학술원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설립 목적은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문·사회과학 부문 및 자연과학 부문의 학자를 국가 차원에서 우대·지원하고 학술연구와 그 지원 사업을 행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현재 임기 2년으로 원무를 관장하고 대표하는 회장과 부회장이 있고 그 외에 인문·사회과학부 회장, 자연과학부 회장으로 되어 있고, 총인원은 회원 정원이 150명에 현재 142명입니다.

사무국 조직은 사무국장 외에 총무과·학술진흥과, 2개 과에 정원 18명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예산입니다.

현재 위치는 서초구 반포동에 예술원과 함께 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국제학술기구프로젝트 수행 등 4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입니다. 학술연구 및 저작이 매우 우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학술원상으로서 매년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기초, 자연과학응용, 4개 부문에 6인 이내로 선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내용은 1인당 5000만 원의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학술세미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5월 중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국제학술대회가 정기적으로 가을에 개최가 되

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정책토론회가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한일 학술포럼이 정례적으로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본학사원에서 가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교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기구에 가입을 하고 있고 또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참여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서 각종 국제학술기구와의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간행물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초학문 분야 육성을 위한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에 500종 내외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학술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걸**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군현 위원님 가장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통영·고성 지역구를 가진 이군현입니다.

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또 산하기관장님들, 준비와 또 각 기관을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국립과천과학관 보고를 들었습니다. 대덕연구단지에 국립중앙과학관만 있다 인구 많은 수도권에 국립과천과학관을 설립해야 한다, 그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 설립·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인지 15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과학관이 확대되고 서울에 그런 과학관이 있어야

된다 하는 용역 연구에 제가 아마 책임을 맡아서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국립과천과학관과 관련해서 이용 고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편의시설이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국립과천과학관 부지가 그린벨트 지역 맞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맞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면 그 편의시설이 증대되어야 된다, 또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편의시설을 확대해서 과학관의 이용객이 더 늘고 또 과학관의 이용객이 더 늘므로 해서 국민의 과학에 대한 인식,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문제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천과학관 이용객이 굉장히 늘기 때문에 많은 편의시설이 필요하고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들·유아……

○**이군현 위원** 동의를 하십니까, 장관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이군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 원자료 공개와 관련해서 과급 효과를 고려해서 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서 국방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 국민의 알 권리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북과의 특수한 대치상황에 있다는 상황에서 공개될 것은 공개되고 공개되지 말아야 할 것은 공개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원자료 공개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원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약을 받고 자료 유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만약 연구자의 시각과 의도에 따라서 편향되거나 왜곡된 연구 결과가

검증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개될 때 국민에게도 교육정책에 좀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사교육 시장과의 관계를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일선 학교가 학교 서열화로 인해서 지나치게 경쟁 심화가 생기고 소위 상·하위 학교가 드러남으로 해서 하위권에 속하는 학교에 대해서 기피현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공개함에 있어서 대상 범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전책을 좀 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우선 저희가 수능 결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이것을 국민에게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되고 또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것처럼 학교명이 포함된 수능 정보를 연구의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하는데 공개할 때에……

○**이군현 위원** 맞는데, 서약을 받지만 우려되는 점들이 있으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군현 위원** 그 점들을 교과부에서 신중하게 한계를 정해서 잘 하시는 게, 무조건 몽땅 완전히 공개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잘 해 주시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이군현 위원** 그다음에 영어 원어민 강사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영어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좀 신뢰성 높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나, 특히 성범죄 이런 등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학생 보호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관리를 좀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NEIS 시스템하고 연계해 가지고 원어민 영어교사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4월 2일 날 제가 교과위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초등학교 교과서에 맞서서 우리도 독도 관련 국정교과서를 개정해야 된다고 질의를 했고, 그때 아마 장관님 못 나오시고 1차관께서 나오셔서 가지고 동의를 하

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이군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2009년도에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가지고 2011년도부터인가요, ‘한국사’로 명칭이 바뀌고 선택과목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이군현 위원** 저는 일본도 그렇고요, 대입에서 국사 응시율이 다른 과목의 한 2배로 제가 보고는 그렇게 받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소위 우리로 말하면 공민이라 그럴까요, 과거의 일반사회라 그럴까요, 자기네 정부에 대한 이해, 거버먼트 1·2 또 자기네 역사 또 자기네 국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필수로 강화하고 있는데 국사가 사회나 또 다른 역사의 n분의 1로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국사를 선택과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한국 국사에 대해서 반드시 들도록, 알도록 이렇게 필수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장관님께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선 한국사가 처음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것을 넣었는데요.

○**이군현 위원** 재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선택·필수 관계는 상당히 기술적인 면이 또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사람을, 모든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있겠습니까마는 자국의 국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뿌리 또 정신, 뭐 혼을 배우는 건데 자국민에 대한 역사적 인식, 그런 것도 없이 다른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재외동포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학교는 교과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재외 한글학교는 또 재외동포재단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이군현 위원** 금년에도 해외를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마는 나가 보니까 이게 좀 정리가 되었

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외동포 교육 관련 지원도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과부가 총괄토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총리실하고 타 부처하고 협의 시에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총괄적으로 교과부가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글썽, 한글학교의 경우에 한국학교하고, 사실 한국학교의 기능 중의 하나로서 한글학교가 되는 것이 개념적으로 합당한데 이것이 아마 기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글은 문화 쪽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문화부장관하고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이군현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이 결국 그 민족의 정신이고 역사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 교육도 있지만 결국은 문화, 혼, 열, 그런 것 가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둘러볼 때마다 이것 총괄을 좀 해서 뭐를 이렇게…… 심지어 한글학교에도, 한국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 목표 또 교육과정, 이런 정부의 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좀 따로 논다 하는 감이 들어요. 꼭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러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이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북 고창·부안의 김춘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얼마 전에, 바로 4월 13일에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6년 핵물질 방호를 총괄하는 전문 독립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하고 핵 안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위원** 또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해서……

○**김춘진 위원**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핵 방호 국제교육훈련센터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위원** 그리고 또한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법안 3건이 계류 중이지요, 3건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위원** 그런데 해당 법안들 중 쟁점 중의 하나가, 현재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 법안이 3건인데 독립 여부가 하나의 쟁점이에요.

그래서 보면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님과 정두언 위원님께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 또 본 위원이 제출한 법안은 독립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그냥 독립해야 된다고 봅니까, 통합해야 된다고 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희는 지금 현재 있는 대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기능의 특수성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서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20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원자력발전소 수출하면서 외국 사람들을 교육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통합하겠다는 것은 대통령님 말씀 취지하고도 어긋난다고 봅니까.

다음에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 수출에 있어서 2012년 11월 핵안보정상회의 유치까지 국민 모두가 참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까지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을 연장 또는 개정해야 할 입장입니다. 향후 원자력 수출 뿐만 아니라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포화 등으로 한미원자력협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올 것입니다.

장관님, 이번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유치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한국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

든요.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글썄, 이것은 좀 민감한 사안이라 정부의 입장을 여기서 말씀……

○**김춘진 위원** 아니, 원자력 중에 한국에서 그러한 중요한, 47개국 대표가 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나머지 3개는 여기 오면 좀 유리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위원**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불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종현** 이 부분은 저희가 원자력 비핵화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천명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만일 이 부분에, 핵안보정상회의가 바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의 핵심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김춘진 위원**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 주최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당연히 그런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유리한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종현** 예, 그 이면에는,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런 압력으로 저희한테 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 유감입니다.

○**김춘진 위원** 거기에 관련된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우리 측 대표단을 맡고 있는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이번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후 워싱턴에 머무르면서 한미원자력 개정 협상에 대한 교감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의 조기 협상 개시, 일부 언론은 빠르면 이달 중 협상 개시도 점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달 안에 개시가 될 예정입니까, 차관님?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종현** 현재 그 부분은 외교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김춘진 위원** 아니, 언론에서 이렇게 주창하고 있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이달 내에 됩니까? 다음 달에 됩니까, 언제부터 개시할 예정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종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김춘진 위원**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좀 알아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다음은 파이로프로세싱 문제인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는 별도로 논의할 예정인가요, 건식처리?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종현** 그렇지 않습니다.

○**김춘진 위원** 동시에 할 겁니까?

조현께서는 두 트랙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하고 별개로 하겠다, 그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하실 예정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종현** 현재 저희 부의 입장은…… 지금 외교부의 이 담당이 천 차관입니다. 총리님과 천 차관과 제가 한 번 모임을 가졌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트랙과 그다음에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두 트랙으로 간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종현** 그건 저희 쪽의 소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파이로프로세싱의 타당성 공동조사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전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 잘 아시면 여기서 설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종현**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이기수 대교협 회장이 신임 회장 취임식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신문을 봐서 알고 계십니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뭐 둘 다……

○**김춘진 위원** 보고도 받고 신문도 보시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위원** 그러면 대교협 회장께서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을 어기고 입학전형을 하는 대학에 대해 가능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전에 4월 7일 날이요, 대

교협은 대학 책무성 차원에서 입학사정관계 공통 기준안을 발표했고 필요시에는 공통기준의 준수를 위해 대학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수 회장의 발언 이후에 일률적 적용이 아닌 대학 자율적 규제라는 입장으로 180도 선회했거든.

이렇게 무원칙하게 회장 뜻대로 바뀌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기수 회장이 입학사정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책임 문제 이전에 그분의 발언의 진의라든지 그 내용이 정확히 파악된 후……

○**김춘진 위원** 그분의 발언은…… 계속 고대가 입학사정관계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도 주지도 않고, 오죽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결의를 했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국정감사 때 자료도 전부 다 제출하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계속 빠져나가고 말이지요, 아주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사람이예요. 이런 사람이 또 이런 발언을 한 것 보면 여기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때요? 책임지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당시 기자회견 했을 때의 문서를 봤습니다, 문건을. 그래서 그분이 발표한 내용은 기존 대교협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고, 다만 일문일답 하는 가운데 본인의 개인 의견을 거기서 돌출적으로 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입학사정관계 대학 자율화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번 발언을 했어요, 대교협 회장이 되기 전에도. 그리고 외교 우대해서, 외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가점을 주겠다, 또 2009년 수시 2-2에서 유일한 민족대로 알려진,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해서 뽑았고, 그래서 KBS에서도 시사포커스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고 또 2012년 고교등급제를 공식화하는 듯한 발언을…… 5배까

지 추천을 받아서 뽑자, 한 명도 안 들어간 사람은 5배 추천해도 한 명도 추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봐서 이것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100억을 내면 2세, 3세가 수학능력이 있다고 보면 입학은 시키겠다, 이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조사 이전에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어제 만나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그런 얘기가, 무슨 의도로 얘기가 됐는지, 또 본인이 평소에 충분히 생각했던 자기 사건을 얘기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 해 가지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제 저희하고 대교협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공동으로 발표한 것은 기존에 대교협에서 설정했던 기본원칙,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대학에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는데 그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을 양 기관이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장관님, 여기 3불정책에 대해서 전면으로 배치되는 기여입학제 허용 발언을 했고 또 외교 우대 발언을 했고 또 이게 고교등급제고, 입학사정관계 자율화에 대한 발언을 했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도 본인한테 제가 그 의도가 뭐냐 하니까 자기는 먼 장래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자기 뜻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춘진 위원** 그리고 또 교육의 질에 비해 우리나라 같이 등록금이 싼 데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 요청드리는데요, 등록금 및 대학교수의 월급, 우리 국내 대학별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어느 대학이 등록금이 얼마고 대학교수의 월급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OECD의 등록금과 대학교수의 월급이 얼마인지요,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금……

지금 정부의 지원금을 교과부에서 주는 것만 해도 1년에 1000억을 받고 있어요. 이런 대학이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의 명의로 필서류를 제출하라면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이런 대학이 고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학별로 정부 지원금을 전부 다 조사해 주십시오. 고대가 얼마 받고, 서울대가 얼마 받고, 연대가 얼마 받고, 우리나라

각 대학별로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과부 이외에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돈을 각 대학별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대학이 입학사정관제 서류 하나 제출하라 하면 그렇게 제출하지 않고 말이지요, 또 교과부에서는 불이익을 주겠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님, 나가셨네요. 황우여 위원님께서…… 입학사정관제는 우리가 유도하기 위한 거니까 이 예산은 깎지 말고 연구비라든가 다른 데서 깎겠다, 교과부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깎았는지, 얼마나 줄였는지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으니까 한 3년 이내의 지원금에 대해서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대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김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정두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 위원** 장관님, 작년 사교육 절감 당정회의 때 심야교습 제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과부가 책임을 지고 규제를 하기 위해서 입법을 해서, 교과부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단속해 나가야 된다 했는데 그 당시에 입법이 필요 없고 시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제를 하면 된다,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그러다 결국 또 아무것도 안 되어 가지고 결국 교과부가 그러면 단속은 직접 나서겠다 해서 지금까지 단속을 해 오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시도 조례를 10시로 다 일치시켜서 규제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게 전혀 진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법으로 하자니까 시도 조례로 해도 된다, 시도 조례로 다 맞추겠다고 수차례 대통령께도 보고하고 당에 와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이것

다 할 수 있다, 하겠다 해 놓고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정두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을,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는데 된다 해 가지고 결국 안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조전혁 위원이 거의 2년간에 걸쳐서 전교조를 비롯해서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하라 그랬는데 장관께서는…… 지금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위법이다, 인권의 침해다 해 가지고 안 된다고, 뭐 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니 다 안 된다고 그렇게 수차례 답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행안부에 갔다가 법제처에 가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없다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렇게 거의 2년간에 걸쳐서 안 된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결국은 정부에서 이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외교 개혁에 대해서도 이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된다, 된다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뭐……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 봐야겠지만 말이지요.

장관님, 외교 개혁을 제가 주장했던 것은 자율과 경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런 거고 장관께서는 외교가 자율과 경쟁에 맞다고 사실 얘기한 겁니다.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율과 경쟁이 맞는 겁니까?

옆에 이주호 차관님 다 경제학 한 분도 계시지만 자율과 경쟁에 안 맞는 것은 규제가 안 맞는 것이고 독과점이 안 맞는 것입니다. 독과점이 자율과 경쟁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 외교 같은 것이 독과점이거든요. 외교에 특별히 선발권만 주고 나머지 대부분 학교는 묶어 놓고 이게 어떻게 자율과 경쟁입니까, 나머지 학교들이 다 손발이 묶여 있는데요.

자율과 경쟁을 하려면 전체 학교를 놓고 학교 선택제를 단계적으로 한다든가 또 교사들의 교장 공모제를 한다든가 또 교육과정을 자율화시킨다든가 하면서 학교 전체를 단계적으로 자율화, 경쟁시켜 나가야지 일부 몇 학교만 뚝 떼어 가지고 거기다 선발권 주고 그것을 자율과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독과점입니다. 그것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가장 저해되는 독과점입니다. 그런데 그 외교를 갖다가 자율과 경쟁이

라고 하면서 계속 옹호하는 겁니다.

장관님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와 어긋나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외교는 자율과 경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특혜가 되어 버리잖아요. 특혜가 되어 버리면 결국 돈 있는 자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교육을 유발시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인데 장관님은 줄기차게 자율과 경쟁이기 때문에 외교를 해야 된다고.....

나는 독과점이 자율과 경쟁에 맞다는 그런 이론이 도대체 지구상에서 어디서 성립하는지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학원 심야교습 문제도 그렇게 안 된다, 된다, 된다 해 가지고 결국 정부입법을 반대하셨고 전교조도 결국 위법이다, 인권침해다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해 놓고 결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된다고 된 것 아닙니까?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게 해 줘 가지고 결국 자율형 사립고로 다 간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자율형 사립고 간 게 뭐가 있습니까? 교과부에서 결국 이렇게 되면 자율형 사립고로 다 간다고 해 놓고 어느 학교가 지금 자율형 사립고로 가려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더라도 해야지요. 전혀 가지도 않고 지금까지 교과부 주요 정책들이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선 외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가 개혁이 되면 자율형 사립고로 다 간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부의 고교 정책의 기본이 고교 다양화 정책입니다. 그리고 외교도 그런 다양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독과점의 차원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다양화의 이론에 따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외교의 특성을 살려서 외교가 제대로 기능하게 되면 그것도 아주 중요한 학교 기능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정두언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 대다수 학교는 왜 묶어 놓습니까? 왜 나머지 대다수 학생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묶어 놓고 여기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도 합리적인 면이 있고 고

쳐야 할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외교를 많이 고쳐 가지고, 외교 입시제도 그것은 옛날과 완전히 달라졌고 외교 교육 내용도 많이 앞으로 달라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두언 위원** 또 그렇잖아요, 장관님 만날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학원 심야 교습도 그렇고 전교조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니, 외교 얘기를 드린 거지.....

**○정두언 위원** 지금도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1년 후에, 6개월 후에 장관님 말씀하셔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장관님 또 아무 얘기 안 하세요. 제가 ‘책임 지실 겁니까?’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때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왜 안 된다고 항상 그렇게 비판적으로.....

**○정두언 위원** 안 됐잖아요, 전교조도 안 됐고 심야교습도 안 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외교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두언 위원** 나중에 평가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다음에 전교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변호사 집단, 우리 고문 변호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변호사단이 있고, 그래서 거기들 다.....

**○정두언 위원** 대한민국 정부가 된다고 결정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글썄, 제 말씀을 들으세요. 거기를 다 했는데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니깐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법제처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자 해서 법제처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두언 위원** 교과부에서, 속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장관님은 이것 인권 침해라고 그러셨어요,

위법이라고요. 그런데 법제처는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니, 법제처에서 처음부터 된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두언 위원** 최종적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나왔지요.

○**정두언 위원** 최종적인 것을 얘기하셔야지 무슨…… 교과부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된다고 그랬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우리는 그 결론을 따르 겠습니다.

○**정두언 위원** 우길 걸 우기셔야지, 진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리는 따르 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정두언 위원** 모든 부처가 그러면 모든 것 다 그렇게 법제처로 떠넘겨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법제처에 떠넘기기 전에는…… 떠넘긴 것도 아니고 법제처로 최종적으로 가기 전에는 우리가 아는 모든 변호사 집단에서는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것을 따르 겠습니다.

○**정두언 위원** 변호사 집단이…… 그러면 법제처는 뭐 때문에 된다고 그랬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법제처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정두언 위원** 좋아요, 심야 교습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시도 조례 다 된다고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보고하고 당에다도 다 보고했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우리가 추진할 겁니다.

○**정두언 위원** 추진 언제까지 할 겁니까, 만날 된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책임질 겁니까, 안 되면요? 그런데 책임질 거냐고 하면 꼭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책임지겠다고 말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시도 조례는 딱 나가고 있다가……

○**정두언 위원** 지금 얘기해 보세요, 책임질 거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렇게 자꾸 강하게 얘기하시면……

○**정두언 위원** 도대체 그렇게 책임지는 자세 없

이 일을 해 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강하게 얘기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정치 상황 때문에……

○**정두언 위원** 무슨 정치 상황이에요? 교육이 무슨 정치 상황이에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중단된 겁니다.

○**정두언 위원** 아이고 참나…… 해도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학부모, 아이들이 다 매달려 있는데 장관님은 무슨 변호사 타하고 정치 상황 타하고…… 이렇게 교육 책임지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시·도 교육청에서는 일단 이것을 전부 조례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두언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데 왜 안 됐어요? 거기다 책임 묻습니까,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런데 그다음에 그 뒤로 가 가지고 교육위원……

○**정두언 위원** 거기다 책임 묻는 거잖아요. 그럴 걸 몰랐어요? 저희들은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 된다고 그랬으면 책임지셔야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리는 계속 이것 추진할 겁니다.

○**정두언 위원** 언제까지 추진하실 겁니까? 아이고 참…… 그렇게 공식적으로 다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지켜야지요. 못 지키면 책임지셔야지요.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종걸** 정두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박보환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주 뜨겁습니다. 좀 열을 식히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교과위가 열렸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보고가 진작 있어야 했는데 이렇게 늦게 됐는데, 무상급식 문제가 국민들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잘 아시는 대로 여야 각 정당이 또 이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장관님께서서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3항에

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교육기본법 8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도 잘 숙지하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8조 여기 보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지으신 후에 이렇게도 명약관화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장관님 다른 견해가 있으신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의무교육은 무상급식으로 포함해야 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무상급식 부분은 의무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시면 한번 짚어 보십시오.

의무교육은 강제성을 띠고 있고 각급 학교의 99.8%가 급식을 이미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무교육에는 당연히 의무급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의무급식을 수반하는 경우를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지금 초중등교육법 12조4항에 나온 사항을 보면 의무교육 대상을 갖다가 수업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말씀을 하나 더 드릴까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영진 위원** 수업료로만 의무교육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의무교육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만을 면제하는 형식적 의무교육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시거나 말씀 들으신 바는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영진 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취학

에 필수적인 비용들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국가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정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무상급식 문제가 이제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니까 교과부가 지금까지 죽 해 왔던 스탠스를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상급식 대상을 나눈다는 것은 무상급식을 시혜 차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무교육은 대상을 따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은 문자 그대로 의무교육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 무상교육은 수업료, 입학금뿐만 아니라 학습 준비물과 급식까지 포함해서 취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이고 타당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을 구분하면 더욱 안 됩니다. 기존의 시혜적 관점을 넘어서 보편적인 교육복지의 실현과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학교급식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최근에도 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급식비를 보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영진 위원** 개인적 소청이나 판단 요청에 의한 재판부 판사의 의견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전교조 교육 문제 또 현장교육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위법으로 판단했던 판사도 있고 또 그것이 무죄라고 하는 판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위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시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기초 체력과 평생 건강의 밑거름입니다. 중요한 교육프로그램의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국가가 학교급식을 제도화했다면 국가 책무성의 실현 차원에서 의무교육에서의 학교급식 무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국민적 요구가 여론조사를 해 보면 60% 이상 해야 된다고 나오고 또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그렇

게 요구하고 있는데 마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으로만 대처하신다면 너무 실상과 괴리되고 우리 국민의 아주 열화와 같은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시겠습니까?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법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법적인 말씀을 대 드렸는데요. 무상급식에서는 이렇게 죽 초지일관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해야 할 학생들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을 찾아서 무상급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교육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 학생들의 범위를 우리가 우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농어촌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 학생들은 결국 전면 무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이런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전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김영진 위원** 정부가 하는 지원 계획은 제가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점검하고 보고를 받아 보셨습니까,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의 내용들?

교육적 차원에서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저소득층들, 가난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주 극빈자들, 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습니다. 전부 아이들 개인에게 다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난하다' 가난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요, 어느 시대인데…… 이것 옳지 않아요.

제 말씀 조금 더 들어 보세요.

무상으로 주는 급식 이 자체를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처 내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나는 가난하고 극빈한 그런 가정이다' 어쩌면 가장 감추고 싶은 얘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또 이런 아이들이 자신들의 빈곤을 스스로 증명하고 시혜적 차원에서 밥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이게 급식의무라

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 이것은 정말 교육적 차원에서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재정의 효율성만을 근거로 해서 한번 얘기 해 봅시다.

의무교육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납부금을 면제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염려하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말입니다.

부자감세 90조 원, 4대강 예산에 22조 5000억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수 국민이, 67% 75% 이상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하거든요.

어찌해서 이 정부가 이렇게 4대강, 국민이 반대하는 데, 그런 데는 아주 관대할 뿐만 아니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것 좀 너무 지나친 거다, 내가 그것 적절한 대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죽 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연간 2조 원에 불과한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주 구조적이고도 집요하게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장관님께서 지금이라도 더 이상 이런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을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를 한번 말씀하시지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선 학생들이 무상급식 받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것을 수치감으로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과는 관계없게 학부모가 주민센터, 그러니까 옛날 동사무소지요, 거기하고 직접 연결을 해 가지고 무상급식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은 제도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루던 것을 이제는 주민센터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이제 앞으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김영진 위원** 장관님, 그러니까요 왜 쉬운 길을 두고 자꾸 그렇게 계속해서 '나는 무상급식 대상자다' 하는 가난증명을 그 학부모와 그 아이들, 더구나……

앞으로 이것은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시정하지겠다고 하니 그런 동심에 상처를 주는 문제만은 어찌 보면 치유까지는 아니겠습니까마는 우회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학교 전면급식 문제가 나올 때도 어땠습니까?

저는 17대에 솔직히 국회에 안 있었기 때문에 속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는가. 얼마나 문제점을 지적했었고요, 얼마나 논리를 만들었고요…… 학교 전면급식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볼처럼 일어나 가지고 요구하니, 점심시간이 되면 가만히 저 밖에 나가 가지고 그 시간을 면하기 위해서 먼 하늘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5교시 수업 중 치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들 실상을 그때 와서 비디오를 상영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전면급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 무상급식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것 정부가 조금만 재검토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것은 좀 약간 우회하고 그래도 끝까지 무상급식 가난증명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 가지고는 대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 장관님하고 저하고 설전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냐? 제가 지금 걱정하고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국민들의 아주 관심이고 핵심적인 과제로 이미 떠올라 버렸습니다. 누가 막아도 태양을 향해서 손으로 가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이런 것 다 아시니까 지금 당정회의도 하고 말입니다, 이것 까딱하면 6·2지방선거에도 해롭겠다, 표 떨어지겠다, 앞으로 정부여당이 설 땅이 없겠다,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주무부처에서 이걸 다 가로막고 계시냐고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전향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서 그것이 어떤 다른 차원에서 붓물이 터져 가지고 해결됐을 때 그러면 우리 교과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장관님께서 다른 하실 답변은…… 오늘 제가 10분 질의하면서도 제 질의하고 장관님 답변하고 제가 시간을 많이 드렸어요.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짧게 얘기할게요.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백종면 원장님 계세요?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백종면** 예.

○**김영진 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은 그동안 교원과 교육공무원들에 대해서 다양한 연수를 하고 아주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내가 자료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필요한 것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8만 4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계획이 예정돼 있지요?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백종면**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른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연수프로그램 입교식이 막 끝나자마자 바로 뭘 하느냐 하면 4대강 홍보 동영상을 청취하고 돌리고 있어요. 너무나 거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유신시대입니까? 5·6공 시대예요, 지금? 그렇게 속 보이는 짓을 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백종면**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김영진 위원** 질의 또 있어요, 질의.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백종면**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만 6000명 동원해 나가고 연수 막 끝나고 그러고 바로 그냥 4대강 홍보 비디오 틀면 여기 연수받는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연성을 기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참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왜 그것 모르니까? 저도 과거에 공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대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정부에도 해로워요. 정권에도 해롭습니다.

지금 4대강 문제 때문에 이만큼 민생예산이 빨리 들어갑니다, 블랙홀처럼 다 거기 빨려갑니다 하고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신성한 교육기관 연수원에서 그렇게 내대고 합니까? 이것은 무슨 대한뉴스, 옛날에 영화보러 가 가지고 홍보영화 돌리는 겁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백종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백종면** 저희가 연수원의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입교식이 끝나고 나면 정책홍보자료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비디오 자료라든가 또 기타의 자료를 연수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좋아요.

가만 있어 봐요.

그렇게 답변하면 그러면 이 나라 정부에는 막 입교식 끝난 공직자 8만 6000명에게 4대강 예산 홍보만 하는 것이 그것이 국정의 가장 최우선입니까?

어디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백종면**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대부분의 정책홍보자료는 초·중등교육……

○**김영진 위원** 잠깐요.

백 원장!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백종면** 예.

○**김영진 위원** 백 원장의 사고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지적하면 검혀히 받으세요.

내가 지금 그걸 하지 말라고 합니까? 어떻게 연수프로그램 막 끝내고……

아니, 이것 말고 지금 이 나라 국정의 당면 현안 중에서 다른 홍보할 거 없느냐는 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이것이 가장 1순위입니까?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백종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여러 가지 정책홍보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4대강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국회법을 위반해 가지고 아직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착공을 먼저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11개의 법률 위반이에요, 지금 이게.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조금, 보다 더…… 정말로 공직자는 정권을 위해서도, 어떤 특정한 정당을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맑은 마음으로 순도가 높게 공직자로서 일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김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박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정영희 위원님, 박영아 위원님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은 약 1시 정도에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환 위원** 경기도 화성읍의 박보환입니다.

식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답변하시느라 또 자리 지키시느라 장관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오늘은 교과위의 아주 특수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오늘 의사진행발언 없이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의사진행발언 없고 또 한 가지는 질의시간만 좀더 지키는 그런 문화만 정착된다면 우리 교과위도 모범 상임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교과부 업무계획을 보니까 새로운 정책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새로운 정책 도입보다는 지난 2년 동안의 정책들을 보완·관리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한마디로 공교육 내실화 그리고 경쟁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요. 37쪽에 보니까 국립대 총액인건비제하고 그다음에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총액인건비제는 대통령령으로 국립대 교수 정원이 제한돼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없애고 그것도 대학의 자율에 맡겨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그런 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보환 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정책연구, 타당성검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종 연구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곧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타당성 검토, 금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서 이것을 확정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보환 위원** 그런데 이게 타당성 조사를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우리 보고서에 들어가서 정책

추진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박보환 위원** 이게 만약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분명히 추진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는데 타당성 결과가 나쁘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타당성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나쁘게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취지가 워낙 좋은 거고요.

○**박보환 위원** 취지가 좋기 때문에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교수 성과연봉제 이것도 교수사회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 있으신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것을 한꺼번에 그냥 교수 성과연봉제 이려고 실시를 다 해 버리면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 오시는 분들, 초임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교수들이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재계약하는 분들에게 또 이것을 적용하고 2015년에 가서는 모든 교수가 다 성과연봉제를 따르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보환 위원**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작용이나 반발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16쪽에 보니까 교원평가제가 아직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가 안 돼서 시·도 교육청 규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16개 시·도 교육청 교육규칙 제정은 완료된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다 끝났습니다.

○**박보환 위원** 이것 전면 시행에 차질은 지금까지 없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지금까지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박보환 위원** 교원평가제가 결국은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또 학교 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는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요. 장관님께서 직접 챙기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것도 법제화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빨리 그 부분에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보환 위원** 13쪽에 보니까 2013년부터 수능 외국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을 현행 34%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언어는 역시 모든 것이 듣기부터 시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제일 먼저 듣지 않습니까? 듣고 말하고 그다음에 쓰고 읽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듣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0%로 책정이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시험을 보는데 듣기가 많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청소년들이 듣기 훈련이 많이 되어 가지고 듣기 점수가 읽기 점수보다 높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 교육이 거기에 강화되면 무리 없이 학생들이 적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보환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요. 듣기평가 비중을 높이면 사교육 유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어렵게 듣는 것으로 하면 그러겠지만 듣기 수준을 지금의 수준과 별 차이 없이 하면서 듣기의 폭을 넓히면 공교육으로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보환 위원** 알겠습니다.

27쪽에 보니까 대학등록금 문제, 대학과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 실효성도 의심스럽고 이런 느슨한 방침으로 고삐 풀린 등록금 잡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 등록금이요?

○**박보환 위원** 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상한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을 절대 넘길 수가 없으니깐요, 이 법적인 사항은요.

○**박보환 위원** 올해 등록금 인상된 대학 수나 퍼센트 대충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교 총수가 345개인데 그중에 61%인 212개 대학에서, 그것은 전문대학까지 포함됩니다. 거기서 전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등록금 동결하고 있고요.

4년제 대학에서 40%, 그다음에 전문대학에서 한 35%, 이 정도가 지금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어느 수준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으로 올렸는지.

○박보환 위원 교과부에서 노력한 만큼 성과가 좀 나오기는 나오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보환 위원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이 한 350억 정도 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렇습니다.

○박보환 위원 그런데 이 지원금은 대학이 대교협에 신청해서 대교협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서 현재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박보환 위원 그렇다면 대교협 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박보환 위원 그렇지요.

그 평가기준 또 원칙 이런 게 좀 엄정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보환 위원 내년도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 마련한 게 4월 7일 날 발표했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보환 위원 그것 일주일도 안 되어 가지고 이기수 신임 회장이, 아까 김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통기준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급적 않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신임 회장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과연 대교협 평가위원회의 심사가 제대로 될지 좀 회의가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제가 신임 회장을 직접 만나 가지고 많은 시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신임 회장이 입학사정관제가 가는 그 방향 자체를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자기가 그냥 평소에 죽 가지고 있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원칙적인 것을 선언을 했고 그 일문일답에서 개인적인 생각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자기가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본인이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박보환 위원 나름대로 교과부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러겠습니다.

○박보환 위원 그다음에 입학사정관제 시행된지가 3년째인데요. 평가요소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지금 평가지표로 반영되는 것,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학교생활 충실도, 학업의지 등도 다소 모호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교협에서조차 입학사정관제 평가지표를 연구할 인력이나 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입학사정관제 제도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서는 좀더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보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교육 비리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초빙형 교장공모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인력풀을 늘려도 여전히 폐쇄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교장 자격증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이나 개방형 공모제를 좀 대폭 확대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장관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선 이것을 50%로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사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오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부형이나 개방형, 이 둘을 계속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보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박보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英姬 委員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위원입니다.

지난 월요일 청소년과 미성년자의 임신과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의 임신과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최근 불법 낙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 임신은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지만 현행 모자보건법상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태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2008년 보건복지부가 중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형태영역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5.1%에 이르고 여학생의 임신 경험률은 0.3%이며 임신중절 경험률은 0.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임신·낙태의 예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간 청소년 성교육 경험률은 62%에 불과하고 성교육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와 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임신과 낙태 예방을 위해서는 성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 내용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교과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있으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선 시간을 우리가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성교육을 많이 시키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권장 활용자료라고 할까요, 성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가 발간을 해서 그것을 학생들이 쉽게 접하도록 해서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丁英姬 委員** 좋은 생각이십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을 맞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방 교육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임신을 방지해야 하겠습니까마는 부득이 임신을 할 경우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2008년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 가운데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했지만 33%가 자퇴했고 61%는 휴학이나 장기결석으로 처리됐다고 합니다. 임신한 학생은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법 규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자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丁英姬 委員** 그러한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과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과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희로서도 이렇게 미혼모가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로 많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그 학생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교사들 이런 분들이 제대로 그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좀더 적극적으로는 이런 학생들을 그냥 학교에서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안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丁英姬 委員**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대안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교를 정해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그 과정에서 잠깐이라도 대안교육을 받도록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丁英姬 委員** 정말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불행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배가 불러오는데 학교를 다니자니 학생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그렇다고 학교는 다니고 싶고 수술도 못 하게 돼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미성년자들에게 그러한 배려를 학교에서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丁英姬 委員** 교과부는 오는 8월 말 정년퇴임 등으로, 지금 방금 박보환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장 자리가 비는 전국 768개 초·중·고교 가운데 56%에 달하는 430곳에서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자격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서 평교사나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50%에서는 그렇습니다.

○**丁英姬 委員** 교장 공모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런데 현재도 내부 공모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제도는 있습니다.

○**丁英姬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원서를 낼 수 있는

초빙형 또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리가 이번에 50% 늘린 것은 그것입니다.

○**丁英姬 委員** 아, 그것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丁英姬 委員** 그리고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교사 자격증이 없는 외부전문가를 모셔오는 개방형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까지 6차에 걸친 시범사업으로 교장 공모제를 실시한 526개교 가운데 민간전문가가 교장이 된 경우는 0.95%, 정말 5밖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교장 공모제가 대부분 교장이나 장학관·장학사·교사 등의 돌려막기 인사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까지는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교장의 임기가 연임, 2회에 대해서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난 뒤에 그다음에는 공모제로 가서 한번 잔여기간을 마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돌려막기 식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로 늘리게 되면 그것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10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높여 놓으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丁英姬 委員**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 공모제 확대 입장을 밝히면서 경쟁률을 높여 유능한 사람을 교장에 앉히면 교육 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하지만 최근 불거진 교육 비리가 대부분 현직 교장·장학사·교사 등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단순히 교장 공모제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해결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장을 이런 공모제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많이 확대해 놓는 경우 그런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丁英姬 委員** 그런데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

이 주재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기업인 등 외부 경영전문가로 교장 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제기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제가 있었습니다.

○**丁英姬 委員** 예, 계셨어요. 교장 공모제 확대를 통한 교육 비리 근절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장 공모제 방식을 초빙형으로 한정하지 말고 내부형·개방형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과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니까 우선 지금 초빙형을 50%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동시에 내부형하고 개방형 이것도 지금 있는 제도인데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丁英姬 委員** 같이 병행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이 50%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丁英姬 委員**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이것을 우선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면서 동시에 내부형과 개방형을 같이 검토해서 이것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丁英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정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박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娥 委員** 송과갑 출신 박영아 위원입니다.

이렇게 1시가 다 되도록 수고하시는 장관님 이하 교과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관님께서 지난 3월에 요르단에 가서 가지고 요르단의 연구용 원자로 계약을 성공리에 성사시킨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고맙습니다.

○**朴英娥 委員** 지금 우리나라 의학교육 제도가 상당히 복잡한 것을 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朴英娥 委員** 지금 의과대학과 의전원 그리고 이 2개의 시스템이 병행하는 그러한 3개의 교육체제로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의전원 제도를 실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한 후에 향후에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신 것 알고 계시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朴英娥 委員** 그러면 교과부가 지금 방향을 정하하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대강 지금 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朴英娥 委員** 어떻게 정하하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니까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요. 지금 방향은 의과대학, 원래 의과대학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이미 만들어 가지고 실시하는 대학들이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것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지금 조화롭게 융합을 해서 하나의 제도로서 확립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러면 정부가 사실 의학전문대학원 도입할 때는 많은 대학이 원하지 않는 대학도 있었는데 BK21 2차 사업이라든가 또는 로스쿨 정원 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억지로 병행체제 내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중용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朴英娥 委員**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전국의 국립의과대학 또는 의전원 학장님들한테 의견 조회를 한 결과 경북대 의전원을 제외하고는 돌아갈 수 있는 자리를 준다면 의예과 시스템, 6년제 의과대학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대학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서는 자율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대학은 의과대학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의전원 체제로 남아서 발전하고 싶은 데는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기본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형태가 딱 나오겠습니까마는 원칙은 의과대학을 그냥 하는 대학, 그런 대학의 경우에도 4년제 졸업하고 편입을 원하는 학생들을 일정 비율로, 비율은 적겠습니까마는 그것을 뽑을 수 있는 문호는 개방하도록, 개방하도록 하는 그것도 학교에서 아마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지겠습니까마는 그런

정도의 부분을 허용하고 또 반대로 의학전문대학원을 하는 대학도 자기네들은 일반 학생들을 뽑아서 석사가 아닌 학사 과정도 같이 하고 싶다 할 때에 소수의 학생을 허용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것은 두 제도가 결국 하나로 합해지면서 서로 비율만 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런데 의과대학이 종전에도 학사편입제도를 통해 가지고, 소위 학사편입제도를 통해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4 플러스 4 체제를 일부 수용했던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朴英娥 委員** 그런데 그 경우에는 각 대학의 사정에 맞춰 가지고 학사편입의 비율을 정했던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朴英娥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교과부에서 그렇게 의과대학 시스템으로 있거나 또는 돌아가기를 원하는 대학들한테 학사편입의 비율을 자율적으로 맡기실 건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리가 한다면 맥시멈만 정해 주고 그다음에는 대학에서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英娥 委員**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34페이지에 보면 고급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과제하에서 의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의 내용은 지금 장관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신 거랑 상당히 상치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의치학전문대학원 체제와 의과대학 시스템의 자율적 발전 이렇게 하는 게 장관님의 오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맞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朴英娥 委員** 여기 보면 의도적으로,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러한 의도가 여기 업무보고상에 담겨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업무보고 한 뒤에 그동안 상황도 많이 있었고……

○**朴英娥 委員** 업무보고를 오늘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 이 업무보고 내용은 우리가 대통령께 보고드린 것 그것을 그대로 축약해서 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朴英娥 委員** 아니,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간에, 4월 16일에 국회에 나오셔서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그러면 그 사이에 변화된 내용을 여기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린다면, 합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확정된 얘기는 아닙니다. 확정된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그동안에 대학들과 교과부와 연구자들이 같이 이렇게 죽 논의한 결과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뭐냐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朴英娥 委員** 그리고 어쨌든 본 위원도 사실 의전원 관계로 작년과 올해 3월에 두 번의 토론회도 거치고, 또 의전원 관계자들과 많이 만나기도 했지만 원래 당시 도입 목적이었던 것 중의 하나가 대학입시 경쟁 완화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기초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의전원에 진학해서 우리나라에 임상뿐 아니라 기초의학자들이라든가 연구자들을 의학분야에서 많이 배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의도가 실패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의전원 진학자들이 거의 95% 이상 임상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학에 들어와서는 소위 패자부활전이라 그래 가지고 많은 이공대, 그것도 우수 학생들이 자기 4년 과정을 의전원에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해 가지고 대학이, 특히 이공계 대학이 입시학원화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참작해서 가지고 현장에 있는 분들, 현장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의과대학에서 가르치거나 의전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 의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지고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朴英娥 委員**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약대가 6년제로 전환했지요, 약학전문대학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朴英娥 委員** 그런데 그것도 약학대학, 전문대학원의 정원을 너무 잘게 잘라 가지고 교육의 효율성 측면을 해쳤다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의전원 문제와 관계되어서 말씀드

리고 싶은 것은 약학전문대학원을 할 거면 대학에 들어올 때 6년제 약학제로 들어오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2+4로 하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朴英娥 委員** 그렇게 되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또 의학전문대학원과 더불어 약학전문대학이 2+4로 되어 가지고 전국의 이공계 대학의 화학, 생물, 물리, 화공 이 학생들이 이제는 2학년만 졸업하면 약학전문대학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학년 2학년의 모든 과정을 약학전문대학원에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朴英娥 委員**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학전문대학원을 6년제로 도입하는 것은 일단 도입했으니까 계속 가더라도 이것을 2+4로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시고 저한테, 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 기초연구 성과 평가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모든 평가에 있어서 SCI 논문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朴英娥 委員** 지난번에 서울대학교에서도 논문의 수가 아니라 질로 평가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많은 경우에 연구재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은 다음에 논문으로 연구 결과가 나가는데, 거기 보면 그 많은 논문들이 또 영어로 나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朴英娥 委員**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위 감사의 글이 있어요, 어크nowledgement(acknowledgement).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자들에게 나가는 모든 논문에는 컨트랙트 넘버(contract number) 뭐 뭐 뭐가 나옵니다. 계약을 했다는 말이지요, 연구자하고 연구재단이.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 선진국의 경우에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논문을 쓰게 되면 그것은 계약이 아니고 그랜트(grant)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 없이 당신이 이 연구를 하게 주겠다’ 그래서 이게 그랜트입니다. 그래서 그랜트 넘버(grant

number) 몇 번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일단 연구비를 주었을 때 이분이 연구할 능력과 프로포절, 계획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 가지고 주겠다,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연구논문이 나오면 논문을 내도 좋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런 식의, 응용연구가 아니라 특히 기초연구에 대한, 교과부가 주로 기초연구를 많이 지원하고 있다면 기초연구 지원에 있어서는 이제는 계약이 아니라 소위 그냥 주는 그랜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지금 맞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연구비 받고 나서 3년 연구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연구 프로포절 낼 때는 어차피 그전에 받았던 연구비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를 냈는지가 반드시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연구비를 받고 꼭 그것을 계약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내가 의무적으로 논문을 종료 후 1년이나 2년 후까지 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야말로 SCI 논문의 양산을 권고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자들이 꼭 내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충분히 안 끝났는데도 어느 정도 마감하고 결과를 내고, 또 그다음에 2단계에서 내 가지고 논문의 수를 늘려야만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과부에서 이제는 우리 연구 시스템을 선진화한다면 정말 해야 될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에 이미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박영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조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전혁 위원**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 남동 을 출신 조전혁입니다.

저는 평소 정보 공개, 공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걸 아마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교육권이라는 게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고 관련된 다른 모든 권리들은 학부모의 자식을 교육하는 그런 기본권적인 교육권에서 파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을 그만큼 중요시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래서 학생, 학부모가 알고자 하는 정보는 조건 없이 거의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교육 관련 산하단체에서 갖고 있는 정보 중에서 학부모가 아시고 싶어 하는 정보 또는 국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는 다 공개 내지는 공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지고 이미 갖고 있는 정보 말고 학생 학부모가 알고자 하는 정보 중에 우리 교육 관련 기관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생산해서까지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믿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교육기관이 갖고 있지 않아도 학부모가 어떤 정보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찾아내서라도 알려주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조전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학부모들 하고 지금 학교 알리미에 나와 있는 정보들에 대해 가지고 그 정보가 충분하냐 이렇게 여쭙어 보면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로

는 좀 불충분하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학부모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왕따 문제는 있는지, 학교 폭력은 얼마만큼 심각한지, 학교 밖에 나와서 지역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도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폭력 같은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는 장학사 몇 분이 학교가 가지고 둘러봐 가지고는 사실은 모릅니다. 누가 왕따를 당하고 있고 또 그 학교에서 무슨 뭐 일진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요즘 아이들 사이에 소위 유행하는 ‘빵 셔틀’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이제 그런 것은 다들 쉬쉬합니다. 누가 선생님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장학사가 하루 이틀 파견되어 가지고 폭력실태 조사해 가지고는 쉬쉬하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뭔가 하면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라도 정례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이제 학교는 빠지고요, 학부모회나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학교 관련한 정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보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예컨대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학교에 와 가지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느냐” 아니면 “너네 학교에 빵 셔틀이나 아니면 왕따 이런 걸 당해 본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례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고 그러면 교장선생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실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실 거고, 그래서 이런 정보 자체를 측정해서 생산하고 생산해서 또 공개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올해 내로 이런 정보를 측정하고 생산해서 공개하고 그 공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또 내년도에 또는 다음 학기에 어떻게 학교가 변해가고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고 공개하고 공시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마련할 그런 계획을 한번 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간 그 학운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강화를 하

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동안 교장 독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비리도 드러났고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학교에서의 단체라고 할까요, 그건 학운위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학운위의 그 기능을 좀 다양화하고 권한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조전혁 위원** 그 학운위의 기능에 그런 정보의 생산 공개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저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번 저희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면 학교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운위 같은 데서 예컨대 학교급식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내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는지 이런 부분도 저는 조사해서 공개를 하면 학교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검토하느라고 시간만 보내시지 마시고요, 실제로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지금 학교 학부모회를 활성화시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고에서도 있는데 이 학부모회가 보통 언제 결성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학기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있는지 아니면 4월 초 정도에 학부모회가 결성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부모회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1교당 500만 원씩 주어서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을 하고, 또 심사를 해서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모회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게 사실은 결성이 되는데 그 지원하는, 신청하는 부분은 3월 초에 이걸 다 신청을 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부모회가 결성도 안 됐는데 그걸 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회가 다 결성이 된, 4월 초 정도에 결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그걸 공모를 해야지 학부모회들이 좀 자주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 시작을 하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런 시행착오가 있다

고 생각을 하면 내년부터는 한 5월 초에 공모를 받아서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오늘도 사실은 제가 우리 지역에서 학운위 분들하고 같이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너무 좀 이게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그런 포맷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무슨 사업계획서를 전달적으로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게 방과 후 활동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해 놔 놓으면 학부모가 숙제 대신하는 것처럼, 이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누구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박한 아이디어라도 좋은 활동이 있다고 그러면 평가받아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조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여 위원** 인천 연수의 황우여 위원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 원장님, 잠깐 좀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올해가 6·25 60주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여러 참전국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국가적으로 존중하고 또 보답해야 될 나라나 또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 그 자녀에 대해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공부할 기회를 좀 드린다는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국립국제교육원장 정상기** 기본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정부초청장학생사업 대상자 중에서 전략 지역 국가를 여러 개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KOICA에서 전략 국가로 59개를 지정을 하고 있고 그중에 6·25 참전 국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OICA 기준을 저희가 준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초청장학생 쿼터를 배정할 때 간접적으로나마 일단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우여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참전용사들의 자녀들이라고 할까 또

우리 국가에 공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요, 찾아보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국립국제교육원 자체에 우리 정부장학금을 좀 수여해서 보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보훈처에서 하는 것은 아마 본인들에게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내가 이런 유공자구나, 그러면 한국에 가서 우리 애들이 공부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이 좀 가능할지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립국제교육원장 정상기** 알겠습니다.

○**황우여 위원** 앞으로도 그런, 우리 원에서 하는 업무가 결국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과 유대를 맺을 수 있는 세계적인 어떠한 인재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구축하는 면도 있는 거네요?

○**국립국제교육원장 정상기** 예.

○**황우여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국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주고 그러한 규정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한국으로서는 마땅한 일이고 그분들로서는 그런 말씀들이 퍼져서 한국은 은혜를 아는 나라다, 또 한국과의 어떠한……

평소에 그분들은 한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 정상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우여 위원** 장관님께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이것이 대정부질문에서도 늘 말씀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5.7%라는 금리는, 영국은 무이자로 전환했고 스웨덴은 1.1%, 화란도 2.39% 이런 식으로 대개 2%대나 또는 무이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에 비해서, 물론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이자의 일부만이라도 좀 지원하시는 것으로 해서, 단계도 취업 후에 상환을 안 할 때는 금리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취업할 때까지의 이자는 좀 뭐라고 할까 학생들로서는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도 취업한다는 게 요새 쉽지 않고 군대 갔다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부는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거

든요. 그러니까 상환 시점이 취업이 늦어지면서 취업할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의 이자만이라도 국가에서 일부를 좀 부담해 주는 식으로 예산을 짜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산 문제가 좀 심각해서 저희로서만 이것을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황우여 위원**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기재부하고도 이번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5.7%를 좀 낮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황우여 위원** 한 4%대만이라도 되면, 한 1% 정도 인하하면 얼마나 더 부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 인하인 경우에 그것도 엄청납니다.

○**황우여 위원** 얼마나 될까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를 들어서 이게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 가면 8690억 정도가 누적되어서 더 우리가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지출하는 경우에 문제가 다음 정부에 상당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하게 이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황우여 위원** 한 6조 원 정도를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금리를 5.7%에서 하여간 4%대로 한 1%라도 내리면 학생들로서는 좀 국가가 혜택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국회와 좀 논의를 하셔서라도 뭔가 이것을 해야지 이대로는 학생들한테 할 말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합리성에 있어서도 취업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취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저 이자로 하고 취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을 못 할 경우에는 현행 금리도 어떨까 싶은데요. 취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의지는 좀 확실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황우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서울 도봉을의 김선동 위원입니다.

장관님, 일본에서 일본 민주당 정부가 무상교육 실시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일본 민주당 정부에서 무상교육 실시하고 있는 것 보고받으신 적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선동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선동 위원** 일본 민주당이 집권을 했고 고교 무상화 그런 공약을 지금 실천에 옮기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요. 지난 3월 31일 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조선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전혀 보고받으신 바 없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없습니다.

○**김선동 위원** 주무국장님 누구시지요? 보고 안 하셨습니까?

언론지상에도 보고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재일 교포 문제로 해서 아무래도 이것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인데요?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학교가 지금 일본에서 무상교육 대상에서 지금 제외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가 한번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이 문제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의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 현황 이런 내역을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 조선학교가 일제식민통치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해방 후에 60만 재일동포들이 우리 민족 교육, 민족 언어교육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 쪽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할 기(棄) 기민정책 비슷하게 해서 결국 일본으로 귀화할 그런 동포라고 보고 좀 방기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역사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조선학교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장관께

서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 서운하네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가 다시 이것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예, 잘 알아보시고요.

그런데 요새 조선학교 그러면 과거와는 달리 저희들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같은 것도 우리 학부모들이 다 떼어 내라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그것 다 떼어내고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상당히 경제난으로, 재정 지원을 그동안에 꽤 해왔는데 재정 지원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탈정치화 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도울 것은 돕고 챙길 것은 챙기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선학교들은 지금 학비무상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 고등학교가 12개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학생이 한 2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학생도 살펴보면 전체 2000명 학생 중에 북한 적을 두고 있는 게 950명 그다음에 한국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900명, 일본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100명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좀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정부가 유독 조선학교를 차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국제기구나 국제법상으로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지난 3월 17일에 일본 민주당정부의 이러한 조선학교를 제외하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본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경고메시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1994년에 비준한 아동권리조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과학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일본 문부성에다가 얼마든지 국제법상으로도 항의를 하고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고 교육부장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남북간의 경쟁이나 정치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조선학교에 대한 그런 지원 문제를 대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통일한국을 예비하는 그런 우리의 진정한 몸짓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조선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학교 수준의 그런 지원을 교과부에서 검토할 것을 장관님께 요청드립니다.

장관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검토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우리 제일동포는 제외동포 중에도 아주 사연이 깊은, 우리가 꼭 그래도 챙겨야 될, 애정을 가지고 챙겨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염원이나 그런 맥락들을 잘 따져서 동포로서 서운함이 없도록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선동 위원** 그다음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당초에 한 70만 명 정도가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선동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11만 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희도 여러 가지를 따져 봤는데요. 여론조사도 하고 한 게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지각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아시다시피 결정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모르고 지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학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등록금을 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문화가, 한 70% 이상이 그것을 가지고 대답을 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마는 역시 그게 지배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자율이 너무 높다 이자율이 높아서 이것을 하는 데도 좀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김선동 위원** 말씀주셨다시피 사실은 우리 한국의 문화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에게 빚을 전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겠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저도 지난번에 그런 문화 그런 것이 있을 것

이라는 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거고요. 고급리나 이런 것도 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고, 그래서 결국은 재정운용의, 정부에서 걱정했던 것보다 기재부에서 걱정했던 것보다 상당히 여유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법안을 내 냈는데요. 헌법 39조 2항에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제가 근거로 해서 군 복무기간 동안에 건강한 신체의 남자라는 이유로 이자 부담을 더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법안을 제가 냈습니다.

재정 여유가 사실 그만큼 생겨 있는 덕인데요. 장관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복무기간 중에 이자를 면제하는 부분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선 재정 여유가 이번에는 그랬습니다마는 다음에도 그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 지원을 하리라고 보는데요.

그것과 분리시켜서 우선 이 문제를 보면 지금 세대군인들이 학자금을 대부받는 그런 사례가 이것 말고도 다른 예가 있는데요. 장기복무세대군인 학자금대부, 이것 보훈처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재근로자 및 자녀대학학자금 융자, 이것은 노동부 이런 데서 쪽 하는데 어디서든 군 복무기간에 이자를 유예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파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지금 ICL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선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분 시혜를 받는 다른 그런 아이템에서, 부분적으로 시혜를 받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게 고려가 안 됐더라면 이제는 거의 사실 보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전국민적인 이런 정책을 하나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응당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이것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조금 아까 부모 자식 간의 그런 동양의 고유문화 이런 덕택에 실제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재정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건데 이런 부분은 교과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알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김선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서울 노원을의 권영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제가 잠깐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이자율이 너무 높다라고 해서 지금 대손충당수수료 0.9% 받는 것, 이것이라도 폐지를 하면 한 1%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말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대손충당수수료라는 게 뭐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게 대출해 주는 장학재단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권영진 위원**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장학재단법에 따르면 만약에 한국재단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다 보전해 줄 텐데 왜 학생들에게 이자를 높여 가지고 미리 이것을 적립을 해 두냐 이거지요. 저는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제가 보건대 지금 다른 정책금리보다 사실상 한 2% 이상 높잖아요. 이것은 지금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정책금리보다 애들 학자금 대출해 주고 그것도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 장학재단에 대한 손실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부가 다 보전해 주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손충당수수료를 0.9%

나 받아서 축적을 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인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법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래서 0.9%면 이게 작지 않은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이라도 저는 낮춰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채권이자 지원으로 올해 예산에 얼마 반영이 되어 있지요? 지금 한 3000억 반영되어 있지요, 장관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위원** 3000억 반영되어 있는데 올해 1학기 때 대출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물론 2학기 가 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남아서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망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위원** 그러면 이걸 그냥 불용 처리하고 마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계획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2학기 때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일지 아직 예측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장관님, 저는 이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1학기 때를 보면 한 1500억을 예상했는데 지금 240억밖에 나가지를 았았습니다. 2학기 때 예상대로 다 해서 1500억이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한 1300억 정도 불용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가서 불용 처리할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저희가 한국장학재단법을 만들고 그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두 가지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장학제도를 만든 게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족 아동들에 대한 무상장학금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난번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3000억에서 전용해서 쓴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475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1300억을 가지고 여기에 전용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을 별도로 만들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추경이 있을 경우에 편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님, 지금 장관님께서 기재부하고 상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추경 편성할 전망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직은 뭐 그런……

○**권영진 위원** 없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채권이자 지원으로 300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불용 처리하지 마시고, 475억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무상장학금으로 전용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예산 부분들은 우리가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으로 1000억을 주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부터 교과부가 이 문제를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알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두 번째, 국립서울과학관 이거 이전되는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결국은 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면 이전 부지를 어느 쪽에 어떻게 만들 생각이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시다시피 이게 창경원 복원계획에 따라서 문화부가 그쪽으로 가고, 일단은 문화부하고 같이 그 건물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결국은 이전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때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학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지금 담당국장께서 “서울과학관은 강북에 있고요, 지역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과학관은 주로 특별전시 형태로, 그리고 체험 중심으로 저희들이 특화해서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실 이미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걸 자기들이 사용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이 지금 경기 동북부, 서울 강북지역의 유일한 과학관입니다. 이걸 만약에 다른 쪽으로 그냥 옮기거나 대책 없이 축소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의 과학관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충족시켜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과학관 문제는 가능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셔서 지금 현재의 위치에 이 과학관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서울 동북부 그리고 경기 동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관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봅니다. 담당국장님 어디 계세요? 윤 국장님 계시나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여쭙 볼 때는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실장 김영식** 담당국장이 행사 협의차 지금 나가 있는데요, 제가 과학실정책실장입니다.

**○권영진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예요?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실장 김영식**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두 부처가 공동 사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이 과학관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전을 해야 될지 그 자리를 다시 써야 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침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건대 굉장히 책임 없고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같이 사용할 경우에 전시실이나 이런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지요?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실장 김영식** 전시

규모는 약 30% 줄어듭니다. 전시물이 30% 줄어들고, 70% 정도는 본관에 있는 것이 상설전시관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 현재보다 62% 줄어드는군요.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실장 김영식** 면적은 그렇게 될 수는……

**○권영진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과학관으로서 기능이 됩니까?

아니, 형식적으로 서울과학관이 이쪽에 있다고 그렇게 밖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고 정말 아이들의 과학체험 그리고 미래 꿈나무를 키우는 과학관으로서 원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해서?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실장 김영식** 그래서 이번 차제에 그러한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살려 나가는 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실장 김영식** 빨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늦었습니다. 2008년, 제가 보건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적했을 때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알아보니까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는 교과부에 이 사실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것은 공동으로 쓰든지 이전해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통보했고 교과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심하게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국민들 실망시키지 않게 준비하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실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장관님 잘 들으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잘 들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리고 끝으로 수능성적 공개가 되고 나서 결과를 보면 군 지역단위, 경남 거창이나 전남 장성이나 강원 횡성이나 경기 양평 이런 지역 아이들의 학업성취도, 수능에 따른 성적이 굉장히 높다고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위원** 이 원인이 뭐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 학교들이 무엇 무엇을 잘해서 이렇게 군 단 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수능성적이 굉장히

높은, 학습력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뭘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거 디테일하게는 제가 잘 모릅니다.

○**권영진 위원** 잘 모르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위원** 차관님 아세요, 이주호 차관님?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

○**권영진 위원** 지금 김성열 평가원장이 이 학교들을 케이스로 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요.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수업, 학생희망 선택수업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교육 없이 좋은 성적을 유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교과부가 이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정해서 확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사교육 없는 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작년 7월 7일 457개예요. 교과부 계획도 장관님 알고 계세요, 2012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한 1000개……

○**권영진 위원** 올해 600개로 늘리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600개에서 2012년까지 1000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교과부가 올해 계획에 훨씬 더 미달하는 결정을 했어요. 올해 실제로는 몇 개 하시겠다고 한 것은 아세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기획분석관 양성광** 총 600개입니다.

○**권영진 위원** 올해 600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까지 457개 교이고 올해 64개 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521개 교. 올해는 600개 교인데 벌써 작년에 목표했던 것에 실제로 미달되는 것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분 말씀해 보세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기획분석관 양성광**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맞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인재기획분석관 양성광** 예.

○**권영진 위원** 아니, 왜 이렇게 되지요? 사교육 없는 학교를 작년에 457개를 지정해서 운영해 보니까 이거 의미가 없다, 당초 계획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우리가 2012년까지 1000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예산 배정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권영진 위원** 아니, 장관님 2012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작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400개를 했으니까 금년까지 500개 이상을 하게 되면 대개 채울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예산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권영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 담당과장님, 지금 장관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교육과학기술부인재기획분석관 양성광** 저희들이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당초 계획에는 못 미치는 521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시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에서 매칭펀드를 투입해서 시도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분 600개를 채울 수 있도록 시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2012년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1000개 만듭니까? 올해 당장 지금 계획대로 하면 143개 만들어야 되는 걸 64개로 줄였는데 어떻게 2012년까지 1000개 교를 만든다는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작년의 발표하고 올해 들어와서 계획의 절반도 못 미치게 하면서 어떻게 2012년까지 그렇게 하고, 그 부분들을 지역교육청 단위 매칭펀드로 넘긴다고요?

노무현 정권입니까? 지난 정부에서 다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복지비 예산은 엄청나게 늘렸다고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고 부담해야 될 재정은 늘리지 않고 전부 지방으로 떠넘겨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비 부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교과부도 사교육 없는 학교를 교과부의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1년도 못 돼서 지금 계획했던 것의 절반도 못 달성하고 왜 이렇게 못 달성하느냐 하니까 지방교육청 단위로 매칭펀드로 넘기겠다는 말이 이게……

장관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거 어떻게 하실지, 이게 잘못됐으면 계획을 수정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나가도 문제없다는 최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2010년까지 1000개를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니까 그

것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도 사교육 없는 학교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시키면서 밀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면요, 저한테 이번 달 안으로 올해는 비록 예정했던 147개 교를 다 하지 못하고 64개를 한 이유하고,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해에는 어떻게 해서 예정됐던 2012년까지 1000개 교를 이렇게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보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권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부천 원미갑 출신 임해규 위원입니다.

우선 ICL제도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주문이 많으셨는데, 올해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제도인데 활용하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았잖아요.

그 원인을 장관님께서 뭐라고 보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세 가지로 이것을 파악했는데, 첫째는 아시다시피 이것에 대한 결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홍보할 시간이 없었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70% 이상이 그런 식으로 대답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낸 사람들의 경우를 보니까 이자율이 너무 높아 가지고 이거 하는데 상당히 주저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진단의 답도 얼추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임해규 위원 첫 번째는 홍보 열심히 해야 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율을 좀 낮춰야 되고, 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마음도 굴뚝같으실 텐데, 또

국가재정 운용하는 쪽하고 신경전을 더 하시고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아까 권영진 위원께서 하신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서 국가의 다른 정책금융보다는 좀 낮추는 것을 우선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시거나 법안으로도 제출되어 있는데 군에 간 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감해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그것은 국방부하고도 얘기해 봄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저런 노력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같은 질의라서 제가 답변요구를 따로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교육을 개선하는 문제인데 제가요새 이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사정을 잘 아시니까 방향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교교육에서 영어수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잖아요? 수업시수도 늘리려고 하시고, 초등학교의 경우, 그리고 회화 중심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회화 전문 강사도 투입을 하시려고 하고 있고 또 토크 프로그램으로 해서 외국인, 외국의 동포나 이런 학생들을 농어촌의 복지도 겸해서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다 좋은데 사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 비율이 이제 한 60%를 넘는다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여전히 시험을 보는 어떤 영어시험 방식이나 또는 수능에서 사실 듣기평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그렇잖아요? 의사소통 중심의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MB 정부 출발할 때부터 영어에 대해서 만큼은 MB 정부가 한번 크게 대한민국 영어교육, 영어공교육을 바꿔보겠다는 큰 기획을 가지고 출발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시들해진 것 같아서, 그런 강력한 의지가 좀 시들해진 것 같아서 그러

면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또 국제적으로 외교활동도 많이 하시고, 성과를 내고 또 우리나라가 외교활동이나 국제적인 무역활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나라인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장관님께서 약간 포괄적이지만 말씀 좀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안심하시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선 영어공부를 할 때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공부보다는 영어를 잘해서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을 위한 영어가 됩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아주 떨어지고 국민들이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6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배우고 나와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하면 수능에서 영어를 떼어내자, 그래서 영어시험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봐도 그걸 수능에 영향을 줘서 대학 들어가는 시험이 아니고 영어는 하나의 자격시험으로 어느 수준에만 이르면 되는 정도인데 그 수준이라는 것이 실용적인 것, 실용적이라는 것은 듣고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만약 실용성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시험으로 대체를 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도 영어시간 시수를 1시간 늘리고……

**○임해규 위원** 장관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전체로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들의 어떤 예산 투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우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회화강사를 투입하는 걸로 사실 안 되잖아요? 그것은 임시방편적인 것이지, 영어선생님들이 정말 수업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여가야 되는 것이지, 또 고등학교 회화시간 1시간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기왕에 있는 시험은 더 문법 중심으로 갑니다, 회화는 저 시간에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규 영어선생님들의 실

력을 높이는 쪽으로 예산을 상당히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뽑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보니까 한 1년 1500명 정도의 특별연수를 시키는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돈을 별로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실행이 되려면 노력을 좀더 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어쨌든 그 계획은 저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그 계획은 공감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논쟁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 정책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적어도 영어교육 과정에 관한 것은 이게 많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교육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큰 어떤 합의나 협약 같은 게 필요한 영역이라고 봐요, 이것은 이것만 딱 떼어 가지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논의를 깊이 해 가지고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 점과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내서 어떤 사회적인 추진방향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함께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교과부 차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이건 특별한 법안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안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걸로는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도 좀 바꾸고 또 다른 무엇보다도 대학이 동참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대학이 대학 수학능력을 평가하려면 고등학교에서 인증시험 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생 뽑을 때 말하자면 면접을 영어로 보겠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사교육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대학하고도 협약을 해야 되는 문제지요. 대학총장님들이 ‘좋다. 뽑아서 아이들이 대학에서 수업을 하는 능력은 대학에서 가르쳐서 하겠다’ 이런 정도 대학이 나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심지어는 서울대나 연·고대 정도 되는 데에서 ‘좋다, 인증시험에 3급 정도만 통과하면 영어는 묻지 않고 들어와서 우리가 키우겠다’ 이렇게 해 줘야지요. 그런 정도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부터 따라서, 지금 제가 영

어와 관련된 TASK 포스가 교과부에 팀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좀더 격상하고 좀더 다듬어서 그렇게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진짜 꼭 해결하자, 그래서 집권 초기에 하려고 하다가 뭐가 좀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불씨를 살려서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고맙습니다. 대학과 하는 면을 지금부터 저희가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직업교육 관련된 것인데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17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교육 단계에서 지금 직업교육이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특성화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또 마이스터고도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위 직업교육체계 전반의 부분적인 효과는 있으리라고 보지만 근본적인 치유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은 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자격체제라고 하는 게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학교를 나오면 자격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직업학교를 나오면 졸업장의 중요성보다는 자격증의 중요성이 훨씬 큰 것인데 그 자격이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자격, 특히 기능사자격이나 이것은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자격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 자격이 실제로 직업 현장에서 쓸모가 있는 것으로 교환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참여정부 때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되면서 노동부 쪽하고 해서 직업훈련 쪽 해서 그런 걸 일추 신경도 쓰고 했는데 그게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그 연계도 좀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교과부에 직업과 관련된 영역이 전문계 고등학교 하나 있고 그리고 전문대학이 있는데 요새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이랑 차별성이 점점 없는 쪽으로 가니까 사실 직업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점점 약해지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자격과 학력의 어떤 상호호환 문제라거나 또는 자격이 진짜 교환가치를

갖도록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그것이 끊임없이 갱신되도록 해서 정말 의미 있는 자격체제가 되도록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려서 의사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알아들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장관님께서 그것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주 옳으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공감을 하신다면 차제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을 맡고 있는 데가 직능원에서 연구 작업도 하시고 있거든요, 직능원에서. 그래서 직능원과 또 노동연구원에서 이 작업을 계속 했어요, 그간에.

그러니까 그런 연구기관하고 다시 한번 점검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 교과부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교과부가 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도 걸려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대번에 이 문제가 잘 원활하게 안 되면 우리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사실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갔다가 직장에서 어떤 직업훈련이나 직업교육을 받고 대학에 가고 더 좋은 진급을 하고 이렇게 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학 졸업의 임금이 굉장히 낮잖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면 우리 교과부의 힘만으로 되지 않고 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여러 부처들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개인적자원기본법도 지금 사실상 작동도 안 해요. 그 위원회도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그간 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사실 활성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라지는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장관님께서 차제에 꼭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주 고맙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고용대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산하에 인력 및 교육 TF팀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주재를 하고 거기에 노동 부라든지 여러 부가 같이 모여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차관께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 그러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말씀 주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바로 그런 취지 때문에 고용대책위원회에 인력 및 교육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 TF팀에 지금 노동부, 복지부 죽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난 정부의 인력정책 그런 차원에서 크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자격 문제라든지 노동시장과 교육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큰 전체적인 국가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F팀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큰 취지를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성과로서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지금 매월 대통령님 모시고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 TF팀도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매월 한 두세 차례 모여서, 각 부서가 모여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큰 방향에서 의제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시면 그 회의가 무슨 비공개 회의는 아닐 테니까 그 회의에서 그간에 논의되었던 어젠다와 논의된 내용들을 주시면……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도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감사합니다.

○**임해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임해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장관님, 요즘 트위터가 유행이었는데 아시지요? 제가 오늘 정부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준비한 질문도 있는데 ‘제가 오늘 교과부장관께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처리를 못 할 정도로 수없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일제고사 문제, 전문대학육성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저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두고 있는데 우선 실정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학 실정은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실제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등록금 내려 달라고 그랬지 언제 채무자 만들라고 그랬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반값 등록금, 등록금 내려야 되는 것이 핵심이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실시해서 언제든, 하여튼 단기적 채무자든 미래의 채무자든 채무자 만드는 것 이거 하여튼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오늘 여러 위원께서 이자율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마는 이자율에 관한 지적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5.7% 이자 안 된다는 것이고, 국가가 고리대금업자냐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차라리 대학교에서는 알바해서 등록금 마련하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거 안 한다’ 안 한다는 게 학교에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그렇게 해 봤어요. ‘알바해서 그 비싼 등록금 낼 수 있을까만’ 그런데 대학생들에게 나돌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차라리 알바해서 등록금 마련하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안 한다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장관께 확실하게 질문해서……

요지는 이자율을 낮추든지, 군대에 갔을 때 가산금 붙이는 문제 그다음에 복리를 단리로 만드는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이미 실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현장의 목소리고요.

그다음에 일제고사에 관해서는 나비효과를 아느냐 하는 것인데, 일제고사를 치르면서 실제로 학교 수업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의고사 실시하고 또 어떤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4학년 것부터…… 7월 13일 시험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7월 13일 시험 때문에

매달 모의고사 보고 있고 그것도 4학년 것부터, 그러니까 전 학년 것 다시 짚는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일제고사로 인해서 나비효과가 일어나서 교과에 폭풍이 불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이 일제고사 실시로 인한 이런 현장의 수업형태 파괴 이것을 알고 있으나, 시험 준비 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것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취업 후학자금제도 보니까 여러 위원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도 하셨고, 답변도 보니까 거의 똑같은 답변이시네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현 상황에서 똑같은 답변밖에 못 나오지요.

○**권영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거 아니고도 많이 들었는데 이거 하려면 차라리 없애버리라는 것이, 너무 정부에게는 가혹한 목소리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겁니다.

애당초 정부가 70만 목표로 한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상을 한 것이지 목표보다도……

○**권영길 위원** 그런데 70만 했는데 지금 한 10 정도밖에 안 된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길 위원** 이 정도면 실패다, 조금 더 완곡하게 예의를 갖춰서 표현하자면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획기적인 어떤 대책도 아니잖아요. 금리의 문제 이런 것 되어야 될 겁니다. 2학기 때 제가 볼 때는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고 있는데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또 정부에서 앞으로 고등교육 지원에 관한 10개년 계획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권유도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등록금 내리는 문제 그것이 가장 현안의 과제이지 다른 것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한제 그것도 안 들어온다 이런 것이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답변은 다 들으셨

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권영길 위원** 이하동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자금 지원을 위해서 예산에 올해 반영하기로 한 액수가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길 위원** 그게 좀 남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70만 안 돼서…… 답변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길 위원**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을 가지고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권영길 위원** 저소득층 지원으로 돌리는 게 어렵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수 대교협회장이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가졌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길 위원** 발언하신 부분에 관해서 교과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고 또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길 위원** 이기수 회장이 대교협회장 자격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돈을 100억 이상 내 건물을 지어주는 사람의 2, 3세에게는 수학능력이 검증된다면 기부입학을 허용하겠다, 즉 기여입학하겠다는 표시거든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가 이기수 회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먼 장래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자기 개인의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먼 장래에 대한 자기 희망사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사항은 대학총장으로서의 희망사항과 대교협회장으로서의 희망사항은 다를 수 있다, 그것을 구분해서 해 달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권영길 위원** 확실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제가 직접 만

났습니다.

○**권영길 위원** 대교협 이기수 회장이 발언한 부분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저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기여입학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3불제가 무너지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셨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길 위원** 즉 입학사정관제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자격을 갖춘 외국어고 학생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고 경시대회 실적도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다음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대학이 입학사정관전형 공동기준을 여기더라도 가급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즉 이것은 뭐냐 하면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키는 것이고 이것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외교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이 외교의 문제, 지난번에 외교 폐지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길 위원** 그런데 외교생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가산점을 누가 주느냐? 바로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면서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이것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이기수 대교협회장에 대해서 경고장을 공식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서로 대화가 됐고, 어제 저희하고 대교협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입학사정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우리가 정했는데 그것을 여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발표를 어제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것으로써 이분이 자기 개인 생각 얘기한 것은 없던 것으로 됐습니다.

○**권영길 위원** 저는 그 발표문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신뢰를 갖도록 장관께서 정말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고려대 수시전형에 관한 문제를 끊임없이 발표도 하고 지적하고 정부 측

에도 촉구하고 또 당시의 대교협회장께도 강력하게 주문하고, 대교협회장께서도 그것을 진상조사하겠다, 위원회도 구성하겠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때 고려대학이 뭐 했습니까? 몇몇 외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처럼 되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나중에 봤더니 거의 인문계는 외교생이 입학생의 반 정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안 하겠다, 시정하겠다고 그랬는데 2010 학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관께서 분명히 국민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기수 신임 대교협회장의 발언은 있을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교협에 입시 자율권을 부여하긴 했지만 이것은 자율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왜? 이명박 정부가 지금 국민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 특히 대통령께서 수차례 강조하신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막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어제 글로써 그것을 분명히 표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어גיע 되는 발언이 있다면, 또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희가 모든 대학에다가 공문을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가 재정적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장관님, '모든 대학'이라고 하면 다른 대학들이 굉장히 항의할 겁니다. 몇몇 대학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알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이기수 회장이 총장으로 계시는 그 대학을 포함해서 이른바 서울 대학을 포함한, 그다음에 이른바 명문사립대학들 그 대학을 중점적으로 지도 그리고 강력한 규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권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몇 분 위원님이 계십니

다. 보충질의는 질의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약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춘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EBS 강의 수능 70% 연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교육과학기술부와 EBS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양해각서를 체결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위원** 또 장관님과 대통령께서 EBS 강의 70% 이상 수능에 반영한다고 약속하면서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0일 교과부는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EBS 강의와 수능시험의 연계를 강화하겠다 그래 가지고 보도자료를 발표했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춘진 위원** 수능시험 연계 강화다, 사교육비의 절감 원년이라는 정책목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주요한 사안으로 삼겠다…… 그런데 교과부의 의욕과는 달리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크지 않고 오히려 정책목표에 집착해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학교교육과 또 수험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관님, EBS 강의 수능 70%를 연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직접적인 연계입니까, 간접적인 연계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직접적인 연계입니다.

○**김춘진 위원** 직접적인 연계라면 국가가 나서 가지고 단순 암기, 이 연계하는 것 달달…… 똑같은 것 아니에요?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식 수업을 시키면 수능과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간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직접적 연계하고 기 출제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기 출제되어 있는 문제를 여기에 다시 옮겨서 문제로 만든다는 시험은 없거든요. 그런 시험은 없기 때문에……

○**김춘진 위원** 그러면 간접연계 하실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니, 직접연계인데 직접연계의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

릴까요?

○**김춘진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직접적인 연계다 해서 문제를 내놓고 이게 간접적인, 똑같은 문항이 아니고 다른 건데 그러면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학생들은 저희가 뭐가 직접이라고 하는 건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러니까 연계 원리, 배운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 직접연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직접연계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원리나 이론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원용해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빙 돌려 가지고 다른 문제가 나오면 그건 직접연계가 안 됩니다.

○**김춘진 위원** 추론해서 답을 쓰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직접연계가 아니고, 그 원리를 알면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직접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시해서 학생들이 알 수……

○**김춘진 위원** 그러니까 추론해서 답을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간접연계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간접연계지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김춘진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직접연계를 하겠다 하면 배운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 직접연계입니다, 추론이 아니고, 추론하는 것은 간접연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단순한 암기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원리 외우면 똑같이 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연계율 50%, 9월에 60%, 그리고 수능시험에도 70%, 이렇게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정부의 발표 이후 일선 학교와 학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뭐 여러 가지로 반응하겠습니까다는 잘못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김춘진 위원**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시간에 EBS 강의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그런 학교가 있습니

다. 또 고3 교실을 중심으로 EBS 교재가 일반 참고서뿐만 아니라 교과서마저 대체하는 현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EBS 교재를 활용한 단순 문제풀이 방식의 파행적 수업 운영은 학교 운영에서 더욱 보편화될 것입니다. 더구나 문제풀이 방식의 수업이 보편화되는 것은 사고력과 창의력, 종합적인 이해능력 등을 측정하는 수능 시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학교 수업의 획일화 현상은 창의성과 자기주도학습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가 EBS를 관리해 주는 곳으로 전략해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원에서는 EBS 강의반을 따로 개설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당 20~30권의 교재를 봐야 하는데 EBS 교재를 강의교재로 활용해 핵심만 골라 가르치는 강좌가 속속 개설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나가서 30% 경우에도 연계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다양한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도록 출제하겠다고 밝혔지요. 그렇다면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EBS 강의 외에 별도의 대비가 필요한 것이고 이는 사교육의 수요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능 70% 연계로 인해 학생과 수험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감소했다고 보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결과적으로 감소될 겁니다.

○**김춘진 위원** EBS 100% 나오는 게…… 수험생이 다뤄야 될 EBS 교재의 수는 이전보다 훨씬 증가했습니다.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연계 대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115종의 교재입니다. 이 경우 문과, 이과, 개별 선택과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감당해야 할 교재는 30여 권이나 됩니다.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입장에서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양이 늘어나 버렸어요. 게다가 수준별·영역별로 제공되는 인터넷 강의까지 더해지면 그 수는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학습계획과 무관하지만 반드시 공부해야 할 교재를 몇십 권씩 더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장관님, 사교육비를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줄이겠다 하는 정치적 목표 때문에 무리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할 때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교육비 줄이는 것은 이렇게 단기간에 EBS 강의에서 70% 출제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절대로 사교육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너무 비관적인 측면만 보셔서 제가 좀 답답합니다마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학교에서……

○**김춘진 위원** 그러면 연말에 사교육비가 정말 줄어들었는가, 학원을 중심으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에 EBS 강의를 개설되고 또 학교교육이 창의력 있는 교육이 되고, 이런 좋은 공교육이 살려지고 또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이런 것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한번 하셔서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위원** 그렇게 꼭 하시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연말에 한번 평가하는 것은 저도 기쁘게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꼭 평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시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EBS는 사교육의 대체과목입니다. 사교육의 대체수단이지 공교육의 대체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교육, 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기본적으로 잘 하면 모든 시험문제에 학생들이 다 100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듭니다. 힘들어서 사교육에서 그것을 100점 맞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릭(trick)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돈을 벌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사교육에서 하는 그 부분을 EBS가 대체해 준다 하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에 가면, 사교육 받으려면 돈을 필요로 하지요. 돈 많은 학생들은 좋은 교육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좋은 점수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EBS가 스타 강사도 초빙하고 좋은 교재도 제공하고 학생들이 EBS에만 전념하면, 학교교육을 보충할

수 있다면 학원을 갈 필요가 없지요.

○**김춘진 위원** 장관님 말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 얘기를 들어 보시지요.

그다음에 EBS 강의를 그 많은 것을 언제 다 하느냐, 이쪽에서 요약해서 사교육을 하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사교육이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EBS 스스로가 또 요약 강의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한 것을 요약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EBS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원은 법적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김춘진 위원** 지금 그 문항이나 이런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하고 EBS로 보충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써 대학 입시에 충분한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70%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변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학생 모두가 70% 맞는다면? 그러면 결국 좋은 대학에 가려면 30%를 위해서 학원을 가야 됩니다. 또 30%는 다양한 난이도,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한다 그러면 70%는 다 공통 점수이고 30%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사교육이 양산 될 거다……

그리고 학원에서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언어·외국어 지문만을 따로 내 정리한 'EBS 지문분석교재'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어요. 학원에서 이미 제작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 관계자가 언어·외국어 지문은 문학 작품 등으로 EBS에 저작권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문학작품인데 어떻게 EBS에 저작권이 있습니까? 그것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EBS 지문을 발췌해서 학원 내부의 강의 교재로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미 우리가 알아봤어요. 학원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EBS에도 지금 그 관련 변호사를 채용해서 그것을 집중 단

속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담당할 거고요.

30% 때문에 또 학원이 있다, 이것은 학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30%가 어디서 되느냐……

○**김춘진 위원** 모든 대한민국 학생들이 70%를 다 맞는다고, 70점을 기본 점수라고 봅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런 점수가 어디 있습니까?

○**김춘진 위원** 그러면 30%가 변별력이 있어야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것, 똑같이 배우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시험 문제 내지요. 다 100점 맞습니까? 다 100점 맞는 게 없거든요.

○**김춘진 위원** 아니, 지금 장관님께서 70% 다 맞도록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니, 직접연계가 70%다 이겁니다. 그러나 간접까지 합하면 100%가 될 수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러니까 직접연계는 암기식이에요. 직접연계라는 게 문제 나오는 것 달달 외우는 거잖아요. 기 출제된 문제를 달달 외우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기 출제된 문제를 외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외울 필요가…… 그것도 응용하지만 직접연계가 되는 거지요. 그건 세가지로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김춘진 위원** 권영길 위원님이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것을 우리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걸** 김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영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娥 委員** 장관님, 올 3월부터 교원평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朴英娥 委員** 그래서 이 교원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지난 2009년도에 선도학교 시범운영을 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朴英娥 委員** 결과를 보고받으셨는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朴英娥 委員**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朴英娥 委員** 그 결과, 선도학교 시범운영한 결과를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 결과가 어떠냐……

○**朴英娥 委員** 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선도학교 운영 결과 우수 또는 만족 이상 비율을 보면 동료교원평가, 학생만족도, 학부모만족도 이렇게 볼 때 교원들은 94%가 아마 서로 잘 준 거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만족도는 60% 정도이고 학부모는 58%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전부 시범평가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놔 가지고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전부 공개해서 학교와 학교 간, 학급과 학급 간에 서로 비교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동료평가 같은 것이 불공정하게 서로 봐주기 평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朴英娥 委員** 예, 앞으로 그 시범평가 결과를 참조해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만큼 우리의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한테 불만족인 상태다, 그만큼 우리의 공교육 부분에 취약점이 있다, 특히 학생들의 만족도라든가 학부모의 만족도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朴英娥 委員** 그래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노력해야 될 게 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예를 들어 지금 교사 양성 어떤 특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기존의 교사 양성 시스템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교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질의를 하나 하고, 교사양성관계에 대해서 교원평가 제랑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의 공교육 부분 특히 교사 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

인지 장관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능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70%를 EBS 강의에서 내겠다고 장관님께서 발표하셨는데 상당히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삼수라는 말 아시지요? 채수 다음의 삼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朴英娥 委員** 지금 이게 삼수라고 항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신문에 났더군요.

○**朴英娥 委員** 왜냐하면 97년도에도, 이미 십몇 년 전에도 우리의 사교육 문제, 대학입시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였고 교육부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마침 대선이 있었던 해였지요.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 가지고 ‘EBS가 위성 교육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사교육 문제 다 해결한다, 자신 있다’ 이렇게 대선후보들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니지요.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난 다음에 당시 또 안병영 장관 시절이었고 또 안병영 장관께서 두 번째 장관 하셨을 때 그때도 EBS플러스1채널에서 ‘이제는 수능방송에 전념해서 내겠다’ 해서, 그때는 80%였습니다. 상당히 높았다 그래요, 연계율이. 그래서 이 수능방송 가지고 모든 사교육 문제 해결된다, 특히 수능에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지난 5년, 6년 동안에 전혀 안 그런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또, 굉장히 보기에는 그럴 듯해 보일 수도 있는데 교육과정평가원하고 MOU도 맺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EBS랑 해 가지고, 물론 그때보다…… 그리고 2004년도에 이미 EBS 강의에 질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당시 이미 메가스터디라든가 온라인스터디학원이 이미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거랑 경쟁하기 위해서 좋은 교사를 스카우트해 가지고 좋은 강의를 해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EBS 강의를 들으면 다 해결하게 하겠다 이것이 6년 전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교원평가에서 보듯이 우리의 학생과 학부모는 특히 고등학교까지 올라갈수록 공교육에 만족을 못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금 수업시간에 한 50% 이상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고3 교실에서도 1학기 정도만 되

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EBS 강의교재를 비롯한 문제집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인데 공교육의 담당자인 교과부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대학입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수능이라는 게 뭐니까? 그냥 고등학교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를 학교에서 개별 평가한 것 가지고 뭔가 부족하니까 전국적인 단위의 표준화된 시험을 가지고 보겠다 그리고 이것을 각 대학은 참고를 해서 당신네들이 원하는 좋은 학생을 뽑으라 하는 그 지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미 교과부에서 검인정한 교과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수능에서 교과서만 가지고 문제 내겠다는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과서 가지고 문제를 내겠다는 게 아니라 수능문제집에서, 그게 EBS든 뭐든 간에 '문제집에서 70% 이상 문제 낼 테니까 학생들은 이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라는 게 어떻게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해야 합니까?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고 토론하고 심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게 공부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나머지 시간에, 수업이 끝난 나머지 시간에 집에 가서 공부하든 학원에 가서 하든 남아서 학교에서 하든 공부를 EBS 문제집 가지고 하는 공부를 1년 동안 시켜야 되나요,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입학사정관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창의성 있는 교육이라는 게 어디 있나요. 저는 이것 정말 실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본말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기본입니까? 우리가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지 지금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그러면 어쨌든 문제집을 가지고 수능공부하는 것, 할 수 없다,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재를 주겠다, 학생들이 이것 가지고 하면 일단 최소한 자기가 수강료를 내 가면서 듣는 사교육 온라인강의는 안 들어도 되니까 그러면 사교육비 절감하지 않느냐,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학생의 EBS 강의는 유료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강의는 무료로 하고. 이게 뭔가 다 지금 안 맞아요. 여러 가지 제가 할 말씀은 많지만 장관님, 그러

면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언어는 누구나 다 하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포인트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언어과목 해서 그 과목을 공부하려면 강의를 몇 시간을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EBS 강의에서 115권이 있는데 거기에 언어강의가 한 10권 이상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따라가면서 들으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담당자 있으세요? EBS 언어강의 교과부에서 승인하겠다는 것, 그것을 죽 한번 들으려면 몇 시간이 필요한지요?

○**교육과학기술부평생직업교육국장 김규태** 통상 지금 언어의 경우는 6단계까지 저희가 심화학습을 만들어 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다 들을 필요는 없고요. 자기 수준 테스트를 통해서 들으면 됩니다. 보통 시차가 3개월 단위로 끊어서 6단계를 6개월까지 가는데 보통 하루 1시간 정도 해서 6개월 하고 있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러면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하는 강의를 6개월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교육과학기술부평생직업교육국장 김규태** 예.

○**朴英娥 委員** 그러면 180시간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평생직업교육국장 김규태** 예.

○**朴英娥 委員** 좋습니다. 국어시간 3학년 내내 들어와서 몇 시간인가요? 국어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국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과목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여간 통틀어서 언어에 해당되는 국어시간, 고3들이 1년 내내 들었을 때 수업시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방학 빼고 다 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을 수동적으로 강의 두 번 들어라 그러면 그게 시간이 나오는 겁니까요?

○**교육과학기술부평생직업교육국장 김규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朴英娥 委員** 말씀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평생직업교육국장 김규태** 지금 EBS하고 수능하고 연계하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사교육비 문제가 큰 현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없다면, 사교육비 부담이 없고 학원이 없다면 물론 모든 것은 학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朴英娥 委員** 그러면 공교육이 사교육에 졌다고 공식적으로 항복선언 한 거네요.

○**교육과학기술부평생직업교육국장 김규태** 아닙니다. EBS하고 학원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朴英娥 委員** 어떻게 다르지요? EBS도 수동 강의예요. 우리가 학교를 왜 문을 엽니까?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언어교사 한 열 사람 택할 수 있지요. 그분이 하는 강의 다 온라인 녹화해 가지고, 학교에서 교사가 강의할 필요 뭐 있습니까? 앉아서 들어야지요, 그것을. 왜 강의하고 왜 교사를 우리가 채용합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수업시수랑 똑같은 시간만큼 최소한 들어야 되는, 그 180시간의 언어과목을 학생들한테 또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는 것을 하라고, 거기에 따른 문제집까지 푸는 시간을 하면 그것보다 더한 시간을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가 얘기할까요, 이제?

○**朴英娥 委員** 예, 장관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마지막 얘기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시간을 학원에서 그냥 보내도록 하는 것도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朴英娥 委員** 그 시간에 학생들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아무리 사교육이 번성했다 그래도요, 고등학교 수능 보는 65만 명이나 70만 명의 학생들이 그 시간에 모두다 학원에 가 있지 않아요. 그 시간에 또 모두 다 개인교사한테 배우고 있지 않습니다. 혼자서 스스로 교과서를 읽고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문제집을 줄 테니까, 여기서 문제 내겠다 그러니 당신들 문제집 가지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나서서 하면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면 박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원의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朴英娥 委員** 학원의 문제가 있지요. 있지만 그것을 정부가 나서 가지고 문제집을 주면서 학생한테 이 문제 가지고 공부해라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은 듣지만 너희들이 다시 또 집에 와 가지고 수능강의 TV에서 보는 또는 조그만 뭐 있지요, 학생들이 보는 작은 PDF 기기, 그것 가지

고 보라 하는 게 교육의 기본방향에 맞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학원에서 강의 안 듣는 학생은 EBS 강의도 필요 없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은 훌륭한 학생입니다, 우수한 학생이고.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은 학원 대체강의를 하게 되면 그것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EBS와 학원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에 가면 엄청나게 돈을 냅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야말로 돈 많은 학생들은 좋은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것은 대단히 나쁜 구조거든요.

그래서 학원 대체수단이 뭐가 있느냐? 가장 좋은 것이 EBS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EBS가 바로 그 부분을 커버해 주고 그 효과가 있으면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 EBS로 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娥 委員** 한마디만 하지요. 그러면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여러 가지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삼수를 하는데, 다 실패했는데 이번도 실패할 거다 그런 전제하에서 삼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 안병영 장관 시절에 80%의 연계율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여기서부터 말이 달라 집니다. 이렇게 높은 연계율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직접 연계율은. 지금도 직간접 연계율을 합하면 75%가 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직간접 연계율을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문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왜 이것이 실패했느냐? 여기에 연속성이 없었다, 말만 하고 그냥 그다음에는 다 흐리멍덩하게 없어졌었다 그것이 중요한 파트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있는 한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겁니다. 그래서 EBS가 학원 대체 수단으로서 확실히 자리 잡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쪽으로 몰고 갈 겁니다.

○**朴英娥 委員** 그러면 교과부가 나서서 우리의 교육과정은 실패라고 자인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하고 또 다름

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공교육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공교육만 받아도 100점을 받는 수능문제를 냅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지금 갈 겁니다. 그런데 EBS 강의는 뭐냐? 그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EBS 강의지 공교육을 죽이고 EBS만 살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朴英娥 委員**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전공하는 물리과목을 제가 지금 수능문제를 풀면 100점 못 맞습니다, 누구나, 어느 대학교수도. 그것은 우리의 수능문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풀어서 거의 100점을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100점 가까운 점수를 맞아야 소위 상위권 대학에 간신히 가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교과서만 가지거나 또는 한두 개 문제집만 사서 볼 수 있었던 학생들도 정부가 나서 가지고 최소한 70%는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이 문제집, 이 강의에서 내겠다고 하면 학생들은 문제집을 가지고 엑스트라로 더 공부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엑스트라가 아니고요. 그것만 하면 된다면 학생들이 학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엑스트라를 다 생략해도 되거든요. 그게 거기가 초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수능시험이 기교를 부려 가지고 학생들 대답 못 하게 떨어뜨리는 시험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시험은 대학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은 되지만 그게 전체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 아닙니까? 그 외 많은 부분은 시험 아닌 것이 거기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능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수능은 달라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朴英娥 委員** 문제의 방식이 똑같은데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게 달라질 겁니다.

○**朴英娥 委員** 지금 우리의 교육 특히 입시제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계시는 교과부 공무원들도 다 그렇고 20년 전, 30년 전에 교육받았을

때는, 그때도 대입시가 있었어요. 그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소위 한 대학에 들어갈 때 최상위권 점수들이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변별력이 없어서 1%, 소위 말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면 1점 가지고 최고점과 커트라인이 정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문제라도 더 맞으려고 온갖 공부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과부가 나서 가지고 70% 문제를 여기서 직접 내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더 변별력이 없는 교육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변별력 가지고, 변별력을 반드시 시험에서만 찾으려 안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생각입니다. 변별력에서 한두 점 더 맞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거든요.

○**朴英娥 委員** 그것은 맞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게 맞다고 한다면 EBS의 역할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朴英娥 委員** 제가 변별력 가지고, 1점·2점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굉장히 우리의 큰 현안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어제든 교과부에서 2010년도 수능성적 발표하셨지요,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朴英娥 委員** 거기에 보면 엄청난 학교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좋다는 외고하고 또 다른 어떤 평준화 지역의 모 학교랑은 한 100점 이상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로 발표가 났습니다. 학교 차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학교에서 한 90점 맞은 학생하고 어느 학교에서 아주 표준편차가 굉장히 높은, 표준점수가 높은 학교를 나온 학생의 어떤 85점하고는 굉장히 다르지요? 그러면 그 학교 차이를 왜 인정 안 하시지요? 소위 말하는 고교등급제라든가 학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저는 이거랑 관계되어 가지고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우리 교육의 정상화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장관님께서서는 자녀분을 다 키우셨겠지만 혹시 나중에 이제 손자 손녀가 대학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학부모가 이 복잡한 입시요강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입시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왜 복잡해졌냐? 교과부가 나서 가지고 변별력을 자꾸만 안 주려고 하니까 대학은 대학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수십 가지 전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 가지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알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어쨌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장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박영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영길 위원** 정옥자 국사편찬위원장님, 내가 간단한 것 질문이 아니고 지원책에 대해서 교과부나 국회에 요청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원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정옥자** 예.

○**권영길 위원** 왜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지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것을 별도로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정옥자** 예.

○**권영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우리 한국학교들 이렇게 만나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이걸 대폭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었던데요. 그런데 오늘 마침 아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정옥자** 예, 미국에서 한 번 하고 작년엔 일본에서 했는데요. 제일 호응이 크고 아주 열성적으로 한 데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교과부에 이걸 요청을 했어요? 인원 지원 및 이렇게 사람이 부족하고……

○**국사편찬위원장 정옥자** 이번에 꼭 할 겁니다. 이번에 해서 어떻게든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해외에서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권영길 위원** 편찬위원회에서 인원 배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인원이 부족한지 그걸 정리를 하셔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풀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것 그런 것도 함께 편찬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을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국사편찬위원장 정옥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길 위원** 수능시험에 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을 걸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질의가 없었네요.

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수능시험 성적 공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또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의 수능성적 공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대로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공개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오늘도 그런 질의가 나왔는데 사교육 없는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제가 지금까지 헛수로 치면 3년째 계속 똑같이 이렇게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능성적 공개되지 않았을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공개했을 때도 그랬고 일제고사 성적 공개했을 때도 또 그랬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성적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일제고사 안 쳐도, 수능성적 공개 안 해도 각 학교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학교별로 다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왜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안 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수능성적 공개했더니 성적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민들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봐라, 어느 지역의 기적을 봐라, 산골 학교에서, 농촌 어느 지역에서 성적이 높아져 있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표를 가리키며)

제가 이 도표도 하고, 또 자료 내놓은 것 여러

차례 보셨지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되어서도 또 그렇습니다. 횡성군, 높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변함없는 겁니다.

1위 경기 의왕시, 2위 동두천시, 3위 부산 연제구, 4위 경기 과천시, 5위 강원 횡성군, 이렇게 죽 해서 전국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15위 장성군, 전국적으로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5위로 되어 있는 강원 횡성군은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민족사관학교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민족사관학교야,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학생은 누구냐? 횡성군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99%가 타 시·군 출신 학생이에요. 즉 서울 강남 지역 같은 데의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99%. 우리나라의 상위권 학생들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횡성군은 민족사관학교 뺐더니 163위잖습니까? 163위예요.

의왕시 경기외고를 뺏습니다. 경기외고에 누가 가냐? 96%가 우리나라의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타 지역에서 가잖아요? 경기외고를 뺐더니 성적이 의왕시가 몇 위였냐? 의왕시면 수도권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21위입니다. 121위예요.

동두천시는 동두천외고 빼면 몇 위냐? 177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177위인데 2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군은 15위인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안 넣었습니다. 왜? 어느 학교라는 게, 장성군의 일반 학교가 금방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전부 되어 가지고 외고 그다음에 자율고 빼면 최하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고 자율고 포함시켜 가지고 성적이 높아졌다, 일제고사 공개했더니 성적 높아졌다, 수능성적 공개했더니 높아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빈부 격차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오래 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만의 책임이라고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빈부 격차가 교육격차를 만들고 교육 격차가 다시 빈부 격차를 만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것 공개해 가지고 성적 좋아졌다, 효과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국민을 속여서 되겠냐는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권영길 위원** 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 표는 제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

○**권영길 위원** 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만든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니, 그 1·2·3 위 죽 한 것이요, 그것은 제가 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못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적은데 거기에 외고가 있다면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고 보고 그런 통계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해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보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제고사’라고 자꾸 부르시는데 학업성취도평가시험 이 성취도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진 학교들이 있겠습니까? 그 학교들에게 우리가 집중 지원을 했습니다, 1440개 학교. 그 결과 이 학교들의 성적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학교당 평균 5000만 원 혹은 그 이상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외고 이런 것이 아니고 뒤 떨어진 학교를 우리가 찾아서 지원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것을 통해서 향상되는데 그것을 방치해 버리면 그 학생들이 영원히 낙오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영길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지원하는 학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느냐는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또는 자율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제가 현장 방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정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교육 예산을, 우리가 ‘특단의’ ‘획기적’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정말 우리 예산을 거의 교육에 다 쏟아 붓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공약대로 GDP의 6~7%로 가야지요. 그렇게 해야 근본적 해결의 방법이 찾아진다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권영길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장관님, EBS 수능강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흐름 같은 것은 아주 면밀히 체크가 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예를 들어서 매월 EBS 수능강의를 청취하는 학생의 비율이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면밀히 보고 계신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그것은 이제 EBS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요. 하여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처음에는 주말만 늘다가 이제는 평일에도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어떤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이런 것이 아마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양면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흐름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적어도 매월 한 번 정도씩은 그래프를 장관님께서 직접 챙기시면서 우리 학생들의 호응도나 이런 것들을 잘 살피서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는 올해 그렇고 또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도록 처음부터 잘 관리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한번 이런 것도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EBS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는 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학교 플러스 학원 플러스 EBS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학교 플러스 EBS 이렇게 가느냐 이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학교 플러스 학원 플러스 EBS 이렇게 가게 되면 또 다른 EBS를 겨냥한 그런 사교육 이런 것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의 흐름들을 잘 좀

체크하셔서 그것이 잘 정착되도록 하시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고맙습니다.

○**김선동 위원** 수능 성적 공개 관련해서 지금도 많은 걱정과 우려들, 그리고 이게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느냐라는 논쟁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논쟁 자체보다는 이미 그 수능 성적이 공개된 바에야 드러난 문제점을 어떻게 진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유할 것이냐 하는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난 4월 13일 날 수능 성적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 분석을 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주로 학교별 그리고 지역별 편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심사로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좀 아쉬워하는 것은 학교별·시도별·지역별 이런 분석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른 변인들과 교차분석을 통해서 보다 좀 정밀하게 의미 있게 좀 분석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교육 시장이 많이 발달해 있는 그런 지역에서의 성적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거나 이런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변인들을 다 집어넣어서 지금 교과부에서 정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흐름과 이런 수능 성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갖는지 교차분석이 좀 다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구요.

특히 우리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나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변인들은 이렇게 지역별·학교별로만 예를 들어서 외고다, 아니면 평준화고다, 아니면 서울이다, 지방이다 이런 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척도를 놓고서 교차분석을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다양하게 해 주셔서 스스로 그 문제를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계시면 그 대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국민 앞에 드러내 놓고 이런 현실을 개조하기 위해서 우리 이명박 정부는 이런 교육정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포인트를 놓고 교차분석을 해 주시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노력까지 하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선동 위원** 오늘 백종면 교육과학기술연구원장님이신가요?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백종면** 연수원장입니다.

○**김선동 위원** 나와 계시지요? 오랫동안 나와 계시는데 질문을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수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계시지요? 연수원 이전 관련해서요.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백종면** 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지금 보니까 대구하고 제주 왔다 갔다 하다가 내부적으로는 대구 쪽으로 가는 걸로 클리어해지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백종면** 국토해양부에서 한때 제주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제주도에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같이 함께 얘기를 해서 지금은 대구 쪽으로 방향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예, 저도 듣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아주 협소한, 있는 그대로 이전을 해 달라 이런 혹시 흐름 속에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백종면** 예, 저희가 건물 연면적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그 연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한 2만 9000㎡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한 2만 2000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저도 저희 실에서 파악하기로도 지금 현재의 규모 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숙박시설도 지금 없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아마 과학기술부 차원에서도, 교과부 차원에서도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예우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관님, 좀 이런 부분도 더 좀 잘 챙겨 주셔서 연수원이 버젓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 한 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위원장 이종걸** 김선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춘진 위원님, 보충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능 EBS에서 출제해서 아이들한테 성적을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위원** 장관님의 교육 철학은 뭡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이 될까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춘진 위원** 아니,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는 교육철학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교육이 살아야지 모든 것이 산다 하는 것이 저의 아주 확고한 교육철학입니다.

○**김춘진 위원** 공교육이 어떻게 살아야지 살까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공교육은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을 살리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아니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공교육이 왜 이렇게…… 그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교원평가제도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교원평가제는 수능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런 것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김춘진 위원** 우리 수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의 교육이 특기와 적성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국영수 위주로 가고 학교 성적 위주로 가고 암기 위주로 가고 달달 외우고 이런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말살시킵니다. 학교에 가면 즐거운 교육이 되고 행복한 교육이 되어야 돼요. 학교 가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 로크가 얘기했지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체력이다. 두 번째로는, 위기관리 능력이다. 세 번째, 창의력이다, 담대함이다, 마지막으로 지력인데 지력은 5% 정도이다.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에는 지식과 정보가 여기 컴퓨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있는 아이들, 건강하고 즐겁고 자기의 그런 교육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초가 튼튼한 아이가 되어야 돼요.

미국도 1960년대에 미국 대학 교육이 엉망이었잖아요. 응용 위주고 암기 위주로 갔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그러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꿨지요. 기초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미국이 르네상스가 이룩된 거지요. 모든 특허나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90개 중점 과학 분야, 다 미국이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암기식 교육에서 남의 것을 베끼는 것에서 창의력 있는 교육으로 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그렇게 바꿀 때 대한민국에 경쟁력이 생깁니다.

이제는 외국 것 베낄 것도 없어요. 달달 거의 다 베껴 왔습니다, 우리가. 거의 다 베꼈어요. 그래서 문제는 성적 위주의 교육시스템, 지금 수능에서 성적 70%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능 성적 위주의 교육시스템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창의력 있는 교육으로 가려면 어떻게 할 건가, 아이들이 즐겁고 이런 교육으로 가려면?

미국의 오바마가 만날 ‘한국 교육’ 하는 것은 교육열을 부러워하는 것이지 교육 시스템을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체력, 체육교육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에 가서 다 물어보고 주변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매일 체육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암기 위주의 교육 시킵니다.

그러면 왜 지금 명문대학, 경기고등학교나 이런 것 평준화시키고 폐지했다고 봅니까, 장관님? 왜 그랬다고 봅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예전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지방에 있는 경북·경남·전주고등학교, 광주일고 해 가지고 끼리끼리 문화가 되고 엘리트층이 재생산됐어요. 그래서 그거 없앤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잘사는 국가가 되려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인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과외공부 시키고 암기하고 이런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리드하고 지배하는 아이가 되고 선배가 끌어 주고 후배가 밀어 주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망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없앤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과감히. 그래서 그다음에 나온 게 그 자리를 외고가 그대로 꿰찼어요. 지금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 나오잖아요. 부모들이 중학교 때부터 과외공부 시키고 뭐 하고 해 가지고 외고 다 들여보내 놓고 우리가 조사해 보면 다 나왔잖아요. 제가 발표 다 했지 않습니까, 과외공부 실태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외고 문제가 우리한테 이 문제가 되는 거고 엘리트층이 그대로 교육에 있어서 교육으로 순환이 되고 제대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나오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자 그럴 때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도 달달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교육이 간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바꿀 것인가? 예전에 조광조가 현량과 만들어 가지고 1519년에 모의해서 기묘사화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기득권층이 얼마나 제한이 심합니까? 1392년에 이 씨 조선 만들어 가지고 태조가 다, 태종이 다 그냥 즐겼잖아요, 공신들 다 공신에서 제하고. 세조 때 다 공신 만들어 가지고 땅 무상으로 다 나눠 주고 세금 안 내고 벼슬하고 그래 가지고 꼭 잡았잖아요, 이조 시대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 번 타파해 보자 했는데 결국엔 기득권층의 저항에 의해 가지고 자기 잘리고 죽고 그랬잖아요, 사화가.

그래서 바로 우리의 교육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제는 세계화 시대에는 외국 것 베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걸 가져야 돼요. 우리 거 가지는 교육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즐겁고 이런 교육 과정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거하고 그럴 때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까.

그런데 지금 수능이나 이런 걸 보면 그거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대책이. 방과후학교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그러면 방과후학교에서 애들 공부 다 해 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가면 서울대학 정원을

찾다가 뺨튀기 할 겁니까? 한정된 거예요. 치킨 게임입니다. 수능도 마찬가지로 치킨게임이에요. 똑같은 저기에서 몇 명이 들어가는데 이 놈이 들어가면 이 놈이 못 들어가고 이 놈이 들어가면 이 놈이 튀겨져 나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이러한 교육제도 어떻게 할 건가? 고대 총장님께서 무슨 ‘대한민국이 가장 등록금에 비해서 질 좋은 교육을 한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국가인데 과연 두 번째 질 높은 대학 교육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아이들 수학이나 과학이라고 하면 세계 최상위입니다. 전부 다. 대학만 가면 바보가 돼요. 그런 교육 시켜 놓고는 등록금 어떻게 해서 제일 우리가 싼값에 교육 잘 한다, 우수한 애들 고대가 말이지요. 전부 다 외교 애들 뽑고 특목고 애들 뽑아 가지고 거저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거저요. 하나도, 대학에 와 가지고 정말 창의력 있는 교육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이 노력을 안 하고 개네들 불러다가 어영부영하면서 등록금만 비싸게 받고 뭐 하고 이러려는 교육 태도, 그게 지금 이기수 총장이 교육감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맡아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도 이제는 아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김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가 고교 수업료를 무상화하면서 일종의 학생 1인당 12만 엔 정도의 수업료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무상 법안을 의결하면서 조선학교 무상화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상에 들어가는 분들 중에서는 대한민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나, 전부나와 관계없이 이걸 추상적인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교육 의무, 미치는 영향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부에서 정부 차원의 일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의견 제시를 포함한 시정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거를 좀 주목하겠습니다. 교과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신속하게 이 점에 대해서는, 교과부장관님께서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해서 오늘 이 점을 특별히 숙지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동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습시다만 이것을 아마 교과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특히 한 번에 명쾌하게 정리해 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사실은 마음의 예단을 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이고요.

정부에서 이것과 관련되어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실지, 가가 될지 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장차는, 길게 봐서는, 조금 더 길게 봐서 대응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정부의 입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황우여 위원님, 박영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만 장관을 비롯한 소속 기관장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할 법안은 양 간사 간에 합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통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권영길	권영진	김선동	김영진
김춘진	박보환	박영아	서상기
이군현	이종걸	임해규	정두언
정영희	조전혁	최재성	황우여

○청가 위원(2인)

김세연 이상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이용원

○정부측 및 기타참석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제1차관	이주호
제2차관	김중현
기획조정실장	김차동
정책기획관	조율래
인재정책실장	최수태
교육선진화정책관	이기봉
미래인재정책관	임승빈
인재기획분석관	양성광
평생직업교육국장	김규태
학교지원국장	이시우
학교자율화추진관	이원근
교육복지국장	이상진
과학기술정책실장	김영식
과학기술정책기획관	윤현주
정책조정기획관	한석수
학술연구정책실장	곽창신
기초연구정책관	박항식
학술정책관	윤인재
대학지원관	김관복
원자력국장	홍남표
대변인	편경범
감사관	박준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설추진단장	김주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추진지원단장	장기열
교육비리근절및 제도개선추진단장	성삼제
정책보좌관	김민수
국사편찬위원장	정욱자

국립특수교육원장	이효자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백종면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엄상현
국립국제교육원장	정상기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우승구
국립중앙과학관장	이은우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	김선빈

【보고사항】

○의안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

(2010. 4. 1 임해규·김영진·김세연·정두언·박보환·서상기·이군현·정영희·안민석·진수희 의원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0. 4. 1 김춘진·김영진·안민석·백재현·박지원·원혜영·최재성·양승조·안규백·박선숙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

(2010. 4. 1 임해규·김영진·김세연·정두언·박보환·서상기·이군현·정영희·안민석·진수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2일 회부됨

**학교무상급식기금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10. 4. 2 김진표·이종걸·신학용·정범구·백재현·이윤석·김춘진·홍영표·김재윤·이찬열·조배숙·오제세·박영선·최문순·우윤근·유원일·박선숙·우제창·강기정·김동철 의원 발의)

4월 5일 회부됨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0. 4. 5 김춘진·김영진·안민석·김성곤·손범규·이정선·나성린·송광호·조정식·백재현·박지원·김금래 의원 발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0. 4. 5 안민석·김영진·김춘진·권영길·박은수·박주선·안규백·양승조·원혜영·이종걸·이춘석·조영택 의원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0. 4. 5 안민석 · 김영진 · 김춘진 · 권영길 · 박은수 · 박주선 · 안규백 · 양승조 · 원혜영 · 이종걸 · 이춘석 · 조영택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6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

(2010. 4. 6 홍준표 · 정옥임 · 김성희 · 이한성 · 김학용 · 박준선 · 김옥이 · 황영철 · 조원진 · 김용태 · 유정현 · 이철우 · 조진래 · 강석호 · 김성식 · 황우여 · 윤석용 · 강용석 · 정해걸 · 배은희 · 이은재 · 김정권 · 강명순 · 나성린 · 강성천 · 박종근 · 홍사덕 · 이종혁 · 장광근 · 최구식 · 정진섭 · 이범래 · 손범규 · 최병국 · 구상찬 · 김장수 · 안효대 · 신지호 · 고승덕 · 이윤성 · 주광덕 · 이명규 · 황진하 · 김선동 · 장윤석 · 김소남 · 박희태 · 허천 · 김광립 · 백성운 · 김충환 · 임두성 · 차명진 · 윤영 · 김효재 · 조문환 · 진성호 · 조운선 · 원희룡 · 정양석 · 현기환 · 조진형 의원 발의)

4월 7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0. 4. 7 조경태 · 이찬열 · 안민석 · 김재윤 · 양승조 · 김우남 · 백재현 · 이성남 · 송영선 · 김영록 의원 발의)

4월 8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조경태 · 이찬열 · 안민석 · 김재윤 · 양승조 · 김우남 · 백재현 · 이성남 · 송영선 · 김영록 의원 발의)

4월 9일 회부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2010. 4. 13 손범규 · 김태원 · 이한성 · 주광덕 · 김혜성 · 박보환 · 현기환 · 고흥길 · 홍사덕 · 임해규 · 박준선 · 김성수 · 정미경 의원 발의)

4월 14일 회부